



교사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성명

수험번호 2023-2028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긴급토론회



일시 2023년 10월 16일(월) 16:00~18: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민주연구원, 강득구 · 강민정 · 김남국 · 김영호 · 김철민 · 도종환 · 문정복
서동용 · 안민석 · 유기홍 의원(가나다순)

사회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좌장 강민정 | 국회의원

발제 김경범 | 서울대학교 교수, 교육랩 공공장 대표

- 토론 1 _ 채송화(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 토론 2 _ 배민(대한민국교원조합, 교사)
- 토론 3 _ 정성윤(실천교육교사모임, 교장)
- 토론 4 _ 김형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 토론 5 _ 장승진(좋은교사운동, 교사)
- 토론 6 _ 정미라(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사)
- 토론 7 _ 구분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 토론 8 _ 주종한(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관)
- 토론 9 _ 정성훈(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과장)

Contents | 목차

발 제

발제. 교육부의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논평과 해설 • 1

- ▶ 김경범(서울대학교 교수, 교육랩 공공장 대표)

토 론

토론1. 2028 대입 제도의 개편,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 • 13

- ▶ 채송화(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토론2.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토론문 • 21

- ▶ 배 민(대한민국교원조합, 교사)

토론3.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논평 • 29

- ▶ 정성윤(실천교육교사모임, 교장)

토론4. 학생들의 입시 스트레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방기하는 대입재편안 • 37

- ▶ 김형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토론5. '5등급제'가 아닌 '절대평가'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이치 • 43

- ▶ 장승진(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토론6. 상대평가 기반 대입 개편, 효과성은 떨어지고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 • 49

- 사라져가는 대학, 졸업생 취업을 급감하는 대학! -
▶ 정미라(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사)

토론7. 현재에 천착한 개편 없는 2028 대입 개편 시안 •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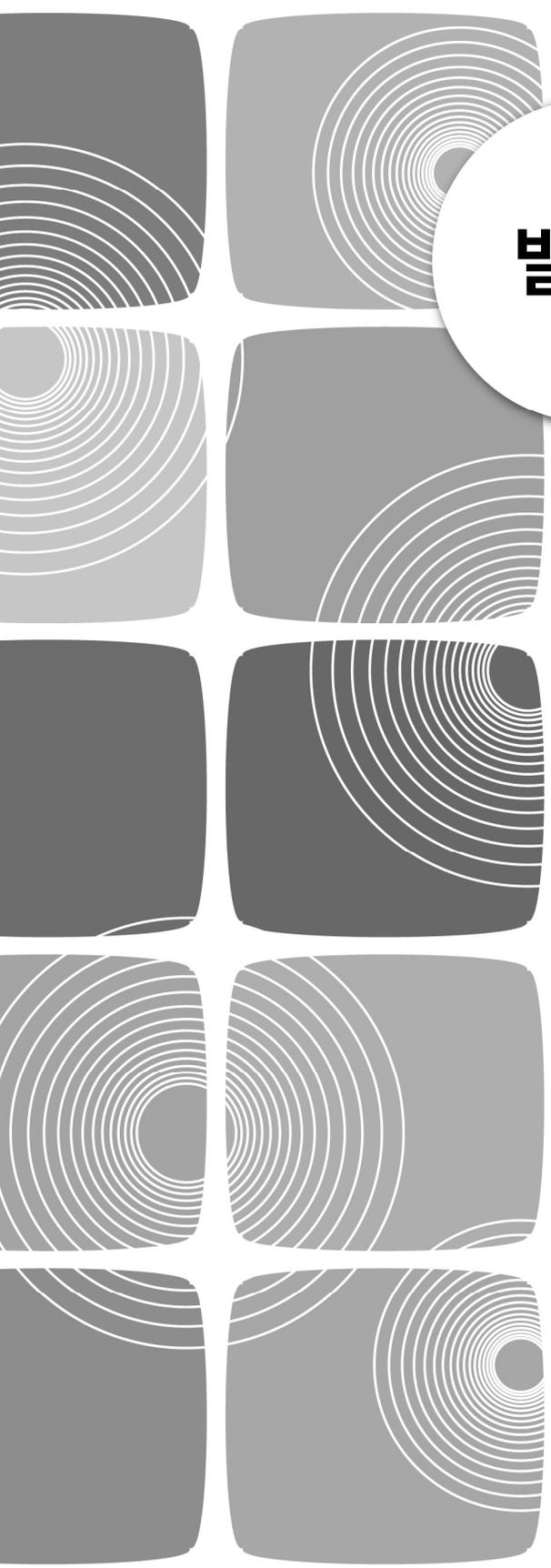
- ▶ 구분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토론8.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의 쟁점 • 63

- ▶ 주종한(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관)

토론9.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시안 • 73

- ▶ 정성훈(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과장)



발 제

교육부의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논평과 해설

▶ 김경범(서울대학교 교수, 교육랩 공공장 대표)



교육부의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논평과 해설

김경범

(서울대학교 교수, 교육랩 공공장 대표)

총 평

- 2023년 10월 10일에 발표된 교육부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대입제도라고 할 수 없다. 고등학교 공교육과 대입제도의 괴리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미래 교육을 위한 초석과 방향성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시와 정시로 구분된 대입 체제 개편, 수능 응시영역 개편,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수능과 내신 논·서술형 평가와 같은 새로운 변화는 모두 미래로 미뤄두었고 언제 실현될지 기약할 수 없다. 오히려 2025년부터 시행되는 2022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학입시보다 내신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고, 수능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수능을 대비해야 하므로, 학교 교육은 무력화될 수 있다. 정부 시안은 단지 최근 '이과생의 문과 침공'으로 더욱 불거진 수능 선택 과목 유불리 현상을 수능 응시영역 공통 과목화를 통해 완화하였을 뿐이다. 대한민국 교육을 병든 환자라면, 정부는 의사로서 병든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살펴보고 있다.
- 급격하게 진행 중인 저출생 고령화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가난한 미래는 이미 결정된 눈앞의 미래가 되었고, 서이초 교사 사태가 보여주는 학교 공동체의 일그러진 모습은 우리 사회의 초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지금은 미래 세대의 생존과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존립을 위해 전면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6월 21일 발표)과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학제도 시안」은 공허한 문구의 나열에 그치고 있다. 전 정부가 정시 확대 정책으로 시대를 역행했다면, 현 정부는 지난 정부가 퇴행한 바로 그 지점에서 더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시대의 불행이다.

수능 개편안 관련

1 평가 방식과 응시영역은 현행 수능 체제를 유지한다.

상대평가(국어, 수학, 탐구)와 절대평가(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가 혼재된 평가 방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서로 이질적인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방식은 타당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한 줄로 세우려면 일관적인 평가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이질적인 평가체계라면 수능만으로 줄 세우는 평가가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와 결합한 <수능학생부 종합평가>로 학생을 선발해야 선발 과정이 타당해지고 고교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응시영역도 현행 수능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선택 과목의 하나로 <심화수학>의 도입을 검토한다.

2 수능 선택형 응시 체제(국어, 수학, 탐구)가 공통 응시영역 체제로 전환된다.

2022학년도부터 시행된 현행 수능 체제의 문제점이었던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정부의 설명처럼 공통 응시영역 체제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수능 공통 응시영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공통과목(한국사, 탐구)과 일반선택과목(국어, 수학, 영어)에 해당한다. 제2외국어/한문은 현행 수능처럼 선택과목 체제를 유지한다.

3 탐구영역의 출제 범위가 1학년에 이수하는 <통합사회 1, 2> + <통합과학 1, 2> 공통과목으로 축소되었다.

수능 역사상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안이므로 어떤 문제가 만들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합리적 의심이 대두된다. <통합사회 1, 2> + <통합과학 1, 2 교과> 범위만으로,

3-1. 수능 문항 출제가 가능할까? 해마다 새로운 문항을 만들 수 있을까?

3-2. 변별력을 갖출 수 있을까? 상대평가는 타당한가?

이 질문들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모두 적용되지만 같은 논지의 반복이므로 통합과학만을 살펴보자. 교육과정에 명시된 통합과학 1, 2의 성격은 ‘중학교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 과학기술의 발달과 미래 예측과 적응, 사회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이다. 반면, 기존 수능의 과학 I에 해당하는 일반선택과목인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이공계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기초 과학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다. 따라서 통합과학 1, 2는 일반선택과목보다 더 기초적인 교과이므로, 중학교 수준의 교과 지식을 다루는 통합과학 교과만을 출제 범위로 한정하면 문항 출제 및 변별력을 두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과의 성격과 범위로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교과 내용이 협소하여 문항 출제가 어렵고, 출제 가능한 문항의 한계가 있으므로 문항 출제를 지속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변별력을 갖추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상대평가를 한다는 정부 시안은 절대평가로 수정되어야 한다.** 현행 수능 탐구영역보다 2028학년도 수능 탐구영역의 변별력은 크게 줄어든다. 출제 문항이 변별력을 갖추려면 그리고 그 변별력을 장기간에 걸쳐 유지하려면 통합과학의 범위를 넘어서 일반선택과목(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발표한 교육과정과 충돌한다. 그래서 중학교 수준의 교과 지식을 두고 상대평가를 적용한다는 정부의 시안은 모순적이다.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올해 중 확정 발표한다는 최종안에서 탐구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3-3. 1학년에 이수한 교과목을 3학년 말에 치르는 수능에서 평가하면 교육과정이 파행되지 않을까?

대학이 2028학년도 대입전형 설계 과정에서, 특히 정시모집에서 학생부를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수능 점수만으로 선발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탐구영역 선택(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교과목 수업은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수능만을 준비하는 학생은 학교가 편성한 선택과목을 이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3학년 학생이 1학년 교과목 범위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은 소모적일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과 실제 교과 운영이 달라지는 교육과정 파행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와 교육청이 감독하면 1학년 교과목을 3학년에 편성하는 일을 막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이 수능 출제 범위가 아닌 3학년 교과목을 공부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학생과 학부모는 수능 점수에 학생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고 3학생은 내신을 위해 수능에 나오지 않은 교과목도 공부해야 하고, 수능을 위해 2년 전에 배운 1학년 교과목도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학생에게 수능과 내신 준비 과정은 완전히 분리되고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렇다면 학생은 수능과 내신 중 무엇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할까.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4 압도적으로 커지는 국어와 수학의 영향력

수능 탐구영역의 변별력이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면, 수학과 국어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진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특히 상위권 대학과 의치약한대학이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국어와 수학만으로 변별된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교과 이수 상황도 국어와 수학 중심으로 왜곡되어 교육과정의 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 과연 학교에서 국어와 수학이 아닌 과목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5 수학과 과학의 학력 저하 우려, 그리고 <심화수학> 도입 검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진로 선택과목과 융합 선택과목이 수능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면, 교육과정은 왜곡되고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질 수 있다. 수능으로 의과대학을 비롯한 자연 계열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수학 심화과목(미적분 II + 기하)과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목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학생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하기 위해 그 교과목을 이수하겠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대학은 대입전형을 설계할 때 이런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구분		특징
공통 과목		학생의 기초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
	진로 선택	교과별 심화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
	융합 선택	교과 내/ 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과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

정부도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분야의 학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비판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심화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도입할지를 검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화수학> 도입은 의도와 달리 왜곡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많은 의대가 현행 수능에서 과탐 II

과목 지정을 포기했고, 서울대마저 2024 입시부터 과학 II 과목 지정을 포기한 상황에서 과연 어느 대학이 심화 수학을 지정할 수 있을까. 학생 수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그렇게 용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대학은 거의 없어 보인다. 즉 학생에게 추가로 한 과목 더 응시하라고 요구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심화수학>을 선택하면 그만큼 다른 과목을 준비할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큰 규모의 선택지로 몰리기 마련인데, 모든 의과대학이 <심화수학>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심화수학>은 학생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심화수학>은 학력 저하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학력 저하 문제의 대책은 학생부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겠지만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의 발표안에는 과학 관련한 학력 저하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과학 분야도 학생부에서 학력 저하 대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6 교육과정 파행으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놓인 고등학교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지침과 위계에 따라 배치하면 수능 출제 범위와 충돌하여 학생들이 외면하게 된다. 그렇다고 수능 준비를 위해 2학년 2학기과 3학년에 수능 과목들을 편성할 수도 없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1학년과 3학년에 나누어 배치하고 싶겠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만든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의 모순을 학교와 학생이 떠안아야 한다. 그리고 수능에 포함되는 국어 일반선택과목(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과 수학 일반선택과목(대수, 미적분 I, 확률과통계)은 사실상 필수과목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보장하는 2022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한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고등학교는 대학입시 현실과 규정 사이에서 편법으로 내몰리고, 교사는 존재 이유를 고민하게 된다. 수능 중심의 대학입시에서는 교사가 더 좋은 수업을 만들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다. 정부 시안은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학입시도, 학교 교육 중심의 대학입시도 아니다. 수능과 대학별 고사(제시문 기반 심층 면접)가 강화된 입시이다. 이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방식이며, 여기에 학교 교육의 미래는 없다.

내신 개편안 관련

7 갑자기 정부는 내신 평가 방식을 전과목 상대평가 5등급제로 “변경”했다.

2021년 새 교육과정 시안에서 제시되고, 2022년 12월에 공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확정되었으며, 2023년 6월에 정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재확인된 내신 평가 방식은 공통과목 9등급 상대평가 + 선택과목 성취평가제(절대평가)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에서 내신 평가는 모든 과목에서 상대평가 5등급을 “병기”한다고 발표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기되지만, 사실은 병기가 아니라 “변경”이다. 상대평가가 병기되면 대학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1학년 공통과목이 상대평가 9등급에서 상대평가 5등급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와 새로운 교육과정은 절대평가를 지향하지만, 정부는 기존 정책 방향을 뒤집고 전 과목 상대평가를 선택했다.

내신 평가체제가 일관화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10% - 24% - 32% - 24% - 10% 방식으로 구성된 정부의 “선진화된 5등급제”는 통계학적 근거가 없다. 왜 10%와 24%가 되어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 기존 9등급제(Stanine) 방식을 자의적으로 조정한 수치와 유사하다. 단지 9등급을 제외한 8개 등급을 2개씩 묶었을 뿐이다.

새로운 내신 체제는 다음과 같다.

■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 ■

구분		절대평가		상대평가	통계정보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
보통교과	공통과목	○	A · B · C · D · E	5등급	○	○	○
	선택과목 (일반 · 진로 · 융합)	○	A · B · C · D · E	5등급	○	○	○
전문교과		○	A · B · C · D · E	5등급	○	○	○

시안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0%		24%(34%)		32%(66%)		24%(90%)		10%(100%)
현행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4%	7%(11%)	12%(23%)	17%(40%)	20%(60%)	17%(77%)	12%(89%)	7%(96%)	4%(100%)

정부는 갑작스럽게 내신 평가 방식을 변경한 이유로 상대평가 9등급제가 “극도의 경쟁”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래서 상대평가 5등급제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이유는 절대평가 시행에 따르는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이자 “변별력 확보”라고 말한다. 정부의 설명에 수긍이 가지만, 내신 평가 방식의 변경은 정부가 고교학점제 정책 추진을 여기서 멈추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정부는 학교 현장에서 절대평가 도입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듯하지만, 이런 현실은 오히려 정부의 정책 추진 역량의 부재를 보여준다. 정부는 학교 현장에서 절대평가가 정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고, 이제야 국가· 시도 평가관리센터를 만들어서 교사의 평가 역량을 키우겠다고 뒤로 물러섰다. 국가 단위 및 지역 단위 평가관리센터는 진즉 설립했어야 할 일이고, 논·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도 이미 마련되었어야 했다.

8 고교학점제는 시작도 하기 전에 무력화되고 실행은 다시 연기되었다.

정부도 잘 알고 있듯이 고교학점제는 상대평가와 양립할 수 없다. 상대평가 5등급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많은 학생이 이수하는 과목을 다 같이 수강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대평가 5등급제 내신에서 한 과목이라도 2등급을 받게 되면 그 영향은 매우 치명적이다. 이제 학생은 원하는 과목이 아니라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학교도 선택교과를 다양하게 펼치기보다는 수능과 연계된 몇 개 과목으로 학생들을 모아야 한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과목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일반선택과목도 사실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공통교과가 되므로 사실상 과목을 선택할 수 없는 선택형 교육과정이 되는 셈이다. 고교학점제는 상대평가가 사라질 때까지 다시 실행이 연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9 학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2등급을 받으면 수시모집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살벌한 내신 경쟁에 내몰린다.

상대평가 5등급으로 경쟁이 완화된 듯해 보이지만, 경쟁은 더욱 첨예해진다.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을 학생을 직관적으로 추정하면 전국적으로 약 4~5% 정도가 될 듯하다. 고 3학생 수가 40만 명이라면 내신 만점자는 16,000명에서 20,000명 사이가 된다. 이는 수시모집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의약 계열과 일부 상위권 대학의 수시 모집인원을 합한

수치와 유사하다. 1학년에 내신 2등급을 받은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가려면 수능에 매진하는 방법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특히 일반고 학생이라면 더욱 그렇다. 학생들이 학교를 자퇴하고 수능에 전념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현상이 가중될 수도 있다. 안정적으로 1등급을 유지하는 학생보다는 그렇지 못한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에서 거의 모든 학생은 대학입시를 두고 매우 애매한 상황에 놓인다. 일찍부터 수능 준비로 전환할지, 아니면 내신과 수능을 병행할지,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하기 위해 진로선택과 융합과목을 적극적으로 이수할지 고민이 쌓인다. 학생에게 입시는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

대입 제도 관련

10 상대평가 5등급제 내신도 변별력과 타당성이 없어서 상위권 대학은 교과전형을 운영할 수 없다.

기존 안(공통과목 상대평가 9등급 + 선택과목 성취평가제)보다 새로운 상대평가 5등급제가 조금 더 변별력이 있을 듯하다. 얼핏 특목·자사고보다 일반고 학생에게, 강남 지역보다 다른 지역에 유리해 보이는 면도 있다. 그러나 의약 계열과 상위권 대학의 수시모집에서 교과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더구나 교과 성적의 타당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만약 이들 대학 중 어딘가 교과전형을 운영하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변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시모집 교과전형에서도 역설적으로 수능이 중요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재학생 수가 많은 학교와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에게 유리하다. 교과전형에서 심층면접을 강화하는 선택지가 있지만, 대학은 굳이 큰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면접을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심층면접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강화될 것이다.

11 학생부종합전형은 선발인원이 약간 늘어나겠지만, 존재 의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변별력과 타당성이 부족하여 교과전형의 선발인원이 줄어들면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릴 수밖에 없지만, 선발인원의 변화는 크지 않을 듯하다. 대학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존재 이유는 학교 교육 중심의 대입전형과 학생 선발의 다양성이었다. 하지만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 기재 내용이 대폭 축소되었고 자기소개서도 폐지되었다.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고 출신 학교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학습 경험을 평가할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앞으로도 학생부 평가에서 선택과목 조합, 특히 이과 쏠림 현상으로 인해 수학과 과학 과목 이수 형태가 모든 모집 단위에서 중요해지면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학생들에게 더 유리해진다. 더구나 교과외의 변별력과 타당성이 저하되면서 주로 수학과 과학을 평가하는 심층면접의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된다. 평가가 수학과 과학에 치중된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은 정체성을 상실한다. 이제 대학은 새로운 학생부 종합평가 방법을 찾아야 할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특히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외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위권 대학은 2025년이 되기 전에 새로운 학생부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2 정시모집은 <수능 100% 전형>과 <수능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구분된다.

정시모집에서는 두 유형의 선발 방안이 대두될 것이다. 하나는 수능 100% 전형이고, 다른 하나는 수능과 학생부를 활용하는 종합전형인데 여기에는 면접이 추가될 수도 있다. 비록 수학과 국어로 변별하더라도 수능의 변별력은 부족하지 않겠지만, 의과대학과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다. 수능으로 선발했을 때 합격자의 점수 폭이 너무 좁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능만으로 선발하면 전술했듯이 출제 영역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파행할 수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수능 100% 전형>보다는 <수능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기를 권한다. 교육부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결국 2028학년도 대학입시는 교과전형(교과+수능),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심층면접/수능), 정시(수능/수능+학생부+심층면접)으로 설계될 개연성이 크다.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수능, 대학별 고사가 중요하고, 정시모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선발 방식이 차별화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매우 비효율적인데다가 모두에게 입시 고통만을 가중시킨다. 입시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키우기 어렵고,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여 새로운 정시모집을 설계해야 하지만, 정부에게는 대학입시를 개혁할 의지가 없다.

새로운 대입 제도

9월에 시작하는 수시모집을 폐지하고 수능 이후에 대입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전형 요소는 수능, 학생부, 면접이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합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그리고 학생을 모집하기 어려운 대학들을 위해 1회 지원하고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하는 면접전형(Early Decision)을 설계하여 배려할 수 있다. 매우 간단한 대학입시이다. 9월 대학입시가 사라지면 수시모집으로 인해 황폐해진 고 3 교실을 회복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지만, 앞으로 논의하게 될 새로운 대학입시는 수시모집 폐지를 전제로 시작해야 한다. 이런 전제에서 내신, 수능, 학생부, 대학별 고사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대학입시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대학입시이다. 만약 9월 대학입시가 2028학년도에 폐지된다면 교육부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토 론
01

2028 대입 제도의 개편,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

▶ 채송화(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2028 대입 제도의 개편,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

채송화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1실장)

I 들어가는 말 - 20년 전으로 회귀

시대는 급변하고 있는데, 대입제도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2028 수능 개편안의 모습은 대략 20년 전의 수능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다. 미세한 조정을 거쳤지만, 결국 결론은 수능 9등급 상대평가 유지, 내신 5등급제로 상대평가 유지이다. 현장에서도 찬반이 오고 가는 의견은 생략하더라도, ‘수능의 영향력 강화’는 어쩔 수 없어 보인다. 저출산,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할 교육의 방향은 다시 ‘한 줄 세우기’에 멈추어 서고 말았다.

II 고교 교육의 위기

1. 과거 경쟁교육 폐단에 발목 잡힌 미래교육

종종 ‘학교가 달라져야 해!’라고 말하며, 고교 교육의 주입식,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이 문제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 문제의 원인을 ‘교사’에게 돌리는 일은 가장 쉬운 일이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사들은 그 분들보다도 더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고등학교 수업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없는 본질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해결도 할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이 기성세대보다 ‘평가’와 ‘선발’에 더 예민하다. 학생들은 ‘평가’와 ‘선발’에 익숙해진다. 그럼에도 그 깐깐한 고등학생들을 어르고 달래서, 성취평가제의 목적에 맞는 창의적인 수업을 해 보려고 대한민국의 많은 교사들이 노력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교과 내용’으로만 학습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평가’와 ‘선발’이라는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경쟁’이 ‘공정’하다는 시스템을 학습한다. 그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앞으로 ‘토의·토론식 수업’, ‘창의적 활동형 수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의 반응을 상상해 보시라. 상대평가가 존재하는

교실에서 창의가 아닌 경쟁의 새로운 양상들이 만들어진다. 학교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아는 과거 ‘주입식’ 교육은 오늘날의 ‘주입식’ 교육과는 매우 다르다.

경쟁이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었던 때도 있었다. 과거 그렇게 믿어야만 했던 불가피한 환경이 있었다. 그러나 미래 한국 사회의 동력이 여전히 ‘경쟁’이어야 하는가에 이제는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교육과 평가의 목표는 ‘선발’이 아닌 ‘성장’이 되어야 한다.** ‘한 줄 세우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맨 앞에 설 수 없는 학생들이 다수라는 데 있다. 학년을 지나오며 아이들은 ‘실패감’과 ‘무력감’을 습득하게 된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존치가 걱정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보고자, 고교학점제 도입을 주장한 교사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학생들도 재미있게 배우고 교사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시안 발표에서도 교육개혁은 찾아볼 수 없다. 고교학점제라는 새 틀을 통해 ‘성취평가제’와 ‘책임교육’에 한 발 다가가려고 시도했었는데, 이번 시안은 ‘고교학점제 포기 선언’으로 보인다.

이번 시안을 보고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포기했느냐’, ‘포기할 거였으면 그동안 교사들을 왜 이렇게 고생만 시켰느냐’는 원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시안의 적용 대상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현 중학교 2학년 학생임을 고려할 때, 학교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전망이다. 수능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메시지는, 고교 교육과정 내 과목 개설의 경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입이 ‘괴리’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발제자의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지침과 위계에 따라 배치하면 수능 출제 범위와 충돌하여 학생들이 외면하게 된다.”, “정부가 만든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의 모순을 학교와 학생이 떠안아야 한다.”는 말에 크게 동감할 수밖에 없다.

수능에 포함되는 과목인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영어’ 과목 등으로 채우고 나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학생, 학부모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수능 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이 편제되어 있는지를 제일 우선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선택, 진로선택의 과목 역시, 수능 과목과 연계할 수 있는 과목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합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교과들이, 그리고 통합과학을 구성하고 있는 과학 교과들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고1 과목을 반복하는 파행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시키지 않는 대입제도를 논의해야 한다.**

2. 고교 교육의 목적은 '대입'이 아닌 학생의 '성장'

현재 고교교육이 독립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대입 선발은 대학이 바라는 인재상에 맞게 대학이 선발해야 한다. 대입의 공정성은 대학의 몫이지 고교 교육과정에 그 짐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교육부가 대학에 부과해야 할 책무를 고교 교육과정에 부과함으로써 우리 미래교육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고교 교사로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발언을 들었다. “대입까지가 고등학교 교육이다.”라는 말이였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제45조)’.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은 ‘대학입학’이 아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입은 어디까지나 자교의 인재상에 맞추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몫이 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 고등학교는 2022년 기준 약 2,400개 있고, 고등학생의 수는 약 126만 명 정도이다. 고등학교 입학률은 90%가 넘는다. 고교 졸업장만으로는 학교 교육의 동기가 되지 못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전국의 고등학생들 중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대학입학’을 희망한다고 하지만, 현재 고등학생의 수를 생각할 때,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치열한 입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시기도 이미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학생의 진로를 위해 더 적합한 환경과 대안이 있다면,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들은 더 많아지고 연령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 교육의 목적을 ‘대입’이 아닌 학생의 ‘성장’에 맞추어야 하는 이유이다.

3. 교사의 온전한 평가권 보장

이번 시안에서는 내신 평가 방식 역시 모든 과목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겠다고 밝혔다. 성취기준을 고려한 절대평가가 어려워졌다. 예를 들면 통합사회 과목에서 1등급이지만 성취기준은 B 이거나, 2등급이지만 성취기준은 A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대학은 다른 방식으로 이 학교의 수준을 산출할 수 있다. 결국 교사들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문항 출제 및 매학기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 등 현장 교사들이 공정한 선발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평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환경은 보장되지 않고, 학생·학부모의 평가에 대한 민원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의 온전한 ‘평가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사에게 부여된 교육권의 핵심은 수업권과 평가권에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25조를 보면 학생에 대한 평가권은 단위학교의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학생을 직접 가르치고

평가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입하는 교사에게 학생평가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평가와 관련된 기준과 작성 요령까지 국가가 규제하고 있고, 학교 내에서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평가 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매년 '학생부 기재 요령'을 통해 '부정적 내용은 최대한 쓰지 않고 긍정적 변화 위주로 기재하도록'하고 있어 교사는 관찰·평가한 내용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대입에서 생기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교사가 작성한 내용에 반발하는 학부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필·수행평가뿐 아니라, 생활기록부에 대한 학부모의 기재 및 수정관련 부당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당 위법 행위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한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기부와 관련해 교육부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수가 2014년 0건에서 2016년 22건으로 늘고, 2017년에는 처음으로 100건을 넘어섰다. 이후 매년 100건을 웃돌면서 최근 4년간 평균 146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평가권을 침해하는 민원에 더해 교육당국이 먼저 교사의 평가권 침해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교사들에게는 온전한 평가 권한이 없다.

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여건' 개선

이번 시안에는 '교원의 수업과 평가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입제도 개선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가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현장 고교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연수가 아니라, 수업을 연구할 시간이다. 고교학점제로 다학년, 다교과 지도를 하는 교사들이 증가한 만큼, 고교 교사들의 '기준수업시수'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교사 정원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각 학교들은 교사 **교사 정원 감축**으로 대혼돈을 겪고 있다. 학급의 수는 늘거나 그대로인데, 교사 중 누군가는 학교를 떠나야 한다. 몇 년째 이어지는 교사 정원 감축으로 고교 교사들은 '올해는 어느 과목의 누가 학교를 떠나게 될까? 이번이 나의 차례는 아닐까?'를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의 고등학교는 학생 수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어, 선택받지 못한 교과목의 교사들은 갑작스러운 이동을 감내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번 시안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은 학생의 진로나 개인의 다양성 지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목적에서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교사들을 점점 파편화시키고 고립시키는 학교문화가 고착될 위기이다. 교사들의 연대와 협력 없이는 교육의 개혁도 공교육 정상화도 성공하기 어렵다.

교육 당국은 교사 정원 감축의 이유로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를 들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들어가고 있는 교실은 여전히 34명, 38명, 때로 40명을 훌쩍 넘는 아이들이 채우고

있다. 과밀학급은 여전한 것이다. 과밀학급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질 높은 수업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이 시급한 이유이다.

Ⅲ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안

이번 시안으로는 고교학점제 및 학생들의 진정한 수업 선택권 담보가 어렵다. 교사들의 가장 큰 고충 역시, 고교 교육과정과 현재 대입 제도와 괴리된다는 점이다. 상대평가의 유지, 과목 선택의 기준을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많은 학생이 수강하여 1등급의 비율의 학생수가 많은 과목 위주로 선택하는 경향을 강화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와 교사는 여전히 수능과 입시를 염두에 두고 대입에 유리한 교육과정과 수업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대입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과정의 질이 아니라,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한 학교나 등급을 받기에 유리한 학교로 몰리게 될 것이고, 학교별 격차, 지역별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쟁 고통 완화 및 고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고교 내신 및 수능에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중기적으로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기존 수능을 대체할 대입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 소멸의 문제를 고려한 미래 교육에 대한 고민과 책임이 필요하다.

또한 수능 위주의 경쟁교육 강화와 고교학점제 무력화는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정규 교원의 확보’ 및 ‘교사배치기준 변경’**이 시급하다. 2과목, 3과목 등 다교과 다학년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많아지면서 교사들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수업 시수 및 업무 부담에 대한 경감 없이는 수업의 질과 평가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교사노조연맹에서는 고교 정상화를 위한 **‘기준수업시수’의 도입**과 그에 따른 교원 정원, 예산 확보를 촉구한다.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과정 전문성을 갖춘 별도 정원 외의 **‘교무학사 전담교사제’의 도입**도 꽤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담임제’를 폐지**하고 **학급 경영 업무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학급 단위의 ‘담임’이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전교사가 10명 내외의 소수 학생의 지도교사가 되어 진로 및 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지도교사제’를 도입·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나가는 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변화도 요구된다. 수시 및 정시의 대입 전형 시기를 일원화하는 등 대입전형은 간소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의 ‘불안’**이다. 이번 시안이 발표되고, 일부 지역의 학원가에서는 ‘긴급 입시설명회’가 잇따랐다고 한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의 경쟁교육 폐단을 극복할 종합대책부터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시안은 현장의 중등 교사 의견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으로 보여 몹시 유감이다. 현재 교육부가 제시한 시안에는 학부모 대상 FGI와 매우 적은 인원이 응답한 설문 결과만 제시되어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할 정책이 막연한 기대와 요구로 적절하게 버무려진 모양새라 불안이 더욱 커진다. 교육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앞으로 11월 대국민 공청회를 시행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 개편안을 확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대입특위 등)의 역할 부재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입특위에 학교 현장의 전문가인 교사는 1명뿐이다. 고교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히 처리해야 할 이번 사안이 철학도 논리도 없이 너무 급하게 봉합되는 느낌이다. 앞으로 5년 단위로 대입제도를 바꿀 게 아니라면, 이렇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은 현장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담보할 수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토 론
02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토론문

▶ 배 민(대한민국교원조합, 교사)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토론문

배 민

(서울 송의여고 역사교사)

1 들어가며

발제자의 발제 내용을 잘 읽었습니다. 내용에서 발제자가 제기한 문제들 중 상당수는 공감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수능 개편안과 관련하여 탐구영역이 공통과목으로 축소가 되면서 교과 내용이 협소해지고 그 수준도 중학교 수준의 교과지식 정도라면 이러한 탐구영역의 시험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지적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 결과 상대적으로 커지는 국어와 수학의 영향력으로 인해 고등학교교육과정에 있어서 파행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점도 수긍이 갑니다.

다음으로 내 신개편안과 관련하여 상대평가의 존치는 결국 고교학점제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라는 점, 특히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기보다 많은 학생이 이수하는 과목을 다 같이 수강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입 제도 관련하여 '9월 대학입시'라 할 수 있는 수시모집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 시각을 공유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의 논의를 토론 내용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2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발제자의 내용에 위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수긍하는 점도 많지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령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과 같은 모임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먼저 학교교육에서 교사의 교육행위와 대입의 문제를 조금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의 글 중에서 '수능 중심의 대학입시에서는 교사가 더 좋은 수업을 만들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실제로 제시간에서는 다소 이상적인 문구로 들립니다.

학교교육의 목표가 더 좋은 수업을 하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더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는 교육철학의 영역이며, 이는 매우 논쟁적인 (controversial) 영역이기도 합니다.

수업뿐만 아닙니다. 무엇이 더 좋은 평가인가 역시 매우 모호하고 논쟁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가령 두 역사교사가 있는데, A 교사가 B 교사에게 B 교사가 낸 평가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A 교사는 B 교사가 수능 문제 형식으로 문제를 내지 않고 (즉 다양한 삽화나 대화 문구, 일차 사료 활용 등을 하지 않고) B 교사의 문제 스타일이 교과서 본문 내용 자체에 치중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그렇게 내면 안된다고 시험문제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즘 일반계 고등학교 가령 1학년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은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는(역사 용어가 아닌) 국어 단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 수업을 못 따라가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B 교사는 역사 서술 내용과 거기에 담긴 기본 지식을 강조하는 문제를 내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역사교육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사의 행동방식과 조건, 상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자든 예일뿐입니다. 학교 교사는 대학교 교수와 달라서 등 교과 교사들끼리 수업도 학년 과반을 달리 들어갈 뿐 함께하고 시험문제 출제도 함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의 교무부의 시험 출제 연수에서는 항상 출제 교사들 사이의 협의를 강조합니다.

결국 위의 B 교사는 동료 교사의 문제 제기에 압박감을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으며 타협하는 것 외에 방법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한 의지는 위에서 예로 든 동료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로부터, 또 더 나아가 학생들에 의해서도 계속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또 부정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혼란스럽고 논쟁적인 수업과 평가의 영역에서 진정으로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자신이 계속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능시험이 없어진다고 교사가 더 좋은 수업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의 교원평가가 없어진다고 교사가 더 좋은 수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교사도, 비도덕적이고 비전문가적인 교사도 얼마든지 수능시험이 있든 없든, 교원평가가 있든 없든 살아남습니다. 아니 공부하는 교사보다 더 평평거리고 잘 지내기도 합니다. 무지할수록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 없으니 당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교사가 더 좋은 수업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 신개편안이나 수능 개편안 혹은 대입 제도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결국 더 많이 공부한 교육자가, 정확히는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다 성숙한 교육자가, 더 좋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교사의 전문 직업성(professionalism)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보다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수능과 상대평가에 대해

그렇다면 학교교육의 내실화, 혹은 정상화와 관련하여 오늘 대입 제도 토론과 관련하여 남은 문제는 학생들이 어떻게 열심히 수업에 임하게 할 수 있을까입니다. 수능이 없다면 학생들이 수업에 더 열심히 임하게 될까요? 즉 오로지 학교 내신 성적과 학생부 내용만으로 대입이 결정된다면 학교교육은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매우 이상적인 주장입니다.

최근의 킬러 문항이 이슈화되긴 했지만, 그전부터, 특히 인강 시장에 거대 자본이 투하되기 시작한 이후, 수능 점수가 더 이상 학생들과 대학 사이의 ‘학력 시장’에서 가치(value) 확인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점을 저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저도 현 수능의 한계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나 교육전문가들은 왜 그럼에도 학부모들이 ‘그나마’ 수능에 의지하고 정시 확대를 원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는 악마도 아니지만, 천사도 아닙니다. 위에서 결국 교사가 공부하는 만큼 좋은 수업을 하게 된다고 했지만, 대학교 교수직처럼 연구 실적으로 승진하는 그런 체계도 없는 이상 현실적으로 정규 교사로 임용이 된 이후에 공부를 하면서 더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해야 할 유인은 딱히 없습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기도한 김정호 경제학 교수가 작년에 낸 책인데 ‘학부모가 나서서 공교육을 뒤엎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공립은 사립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한다. 사립이 공립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오해한다. 오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대다수 사람들의 눈에는 당장 주머니에서 나가는 학부모 부담금만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들이 공립학교가 쓰고 있는 비용을 숨겨놓은 채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130p)라고 통렬하게 공교육 현실을 비판합니다.

한마디로 학부모들에게는 교사들이 제대로 안 가르치고 놀고먹으면서 점수 부풀리거나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교사, 그런 학교에 대한 견제장치로 그나마 인식되는 것이(절대평가였던 학력고사처럼 점수로 반영되든 상대평가인 현재처럼 등급으로 반영되든) 국가시험제도의 존재인 것입니다. 정말 학부모들의 그런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교사들 모두가 수능 같은 시험의 존재 없이도 국가수준의 성취도를 달성하기 위해 교실에서(편하게 좋은 점수를 받으려는) 학생들의 요구와 타협하지 않고 깨끗이 수업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기왕이면 하기 싫은 공부 덜하면서 그래도 점수는 좋게 받고 싶어 합니다. 음악, 미술 같은 과목과 달리 국, 영, 수 같은 과목에 대한 공부 그 자체에 흥미를 느껴서 학구열을 가지고 수업에 경청하는 학생이 한 반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교사라고 그런 학생들에게 수업내용의 의미를 강조하며 철학을 가지고 매시간 사투하듯 수업하는 대신, 적당히 타협을 보려는 유혹을 느끼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나요? 이미, 수행평가는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 내신시험문제들의 수준을 보면 교사들이 학생들과 타협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이 언제나 옳고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동물입니다. 수능이라는 최소한의 객관적인 기준 자체도 없어지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과 교사 사이의 타협으로 인한 교수 활동의 질적 저하는 어떻게 견제할 수 있나요? 교사는 대학교 교수처럼 피어 리뷰(peer review)를 받으며 연구업적을 쌓아가야 하는 직업도 아닌데, 어떤 독립기관이 고등학교 교사의 지적 수준과 교육 활동 수준에 대해 비판적 평가(critical review)를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 역시 ‘네가 얼마나 공부를 객관적으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려주는 장치마저 없다면 자신들의 지적 수준에 대한 그 어떤 겸손도 배울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졸업하게 됩니다. 어찌 됐든 교실에서 잠만 자도 졸업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저 자신들을 붙잡아놓고 공부시킨 학교에 불평불만을 쏟아낼 뿐, 자신에게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깨달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수능뿐 아니라 상대평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육전문가들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면, 즉 교사에게, 그리고 학교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주면, 학교교육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교사로 일하는 저에게 이는 매우 이상적인 주장으로 들립니다.

최근에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된 학교 문제가 시사하듯, 저는 지금의 학교 현실은 학교가 학생에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파적인 시각에서는 학생인권이 강조된 결과라고 말하고 좌파적인 시각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서비스 개념이 강조된 결과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조차 관철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발제자는 ‘결국 학력 저하 문제의 대책은 학생부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적었지만,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정말 그런가요? 교사들이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들이 입력하는 학생부의 내용이 정말 객관성이 있는 내용인가요? 누가 검증할 수 있나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미국처럼 개인주의적 성격을 토대로 하기보다, 담임교사가 부모처럼 자기 반 학생들 대하 ‘보내는’ 것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기를 바라는 정서가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어느 교사가 학생부 내용이 모두 공개되는 마당에 학생들, 학부모들 눈치를 보지 않고 칭찬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운 학생부 기록을 할 수 있나요? 또한, 절대평가에서 내가 가르친 교과목의 점수와 등급이 낮게 나온 학생들이 만약에 내가 부여한 점수와 등급 때문에 대학에 떨어지게 생겼다고 말한다면 어느 교사가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평가는 교사를, 학교를 더욱더 학생과 학부모에 끌려가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수능이 현재처럼 신뢰성과 타당성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능시험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가 늘어난 이래 학생들이 정말 자신의 소질과 꿈을 토대로 탐구 과목을 선택하고 있나요? 특정 대학이 가지는 비전에 공감해서 지원하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의 대학을 골라 지원하고 있는 현실과 마찬가지로, 수능 과목에 있어서도 학생들은 그저 높은 등급을 받기 쉬운 과목을 선택할 뿐입니다. 사실 킬러 문항이 문제가 되고, 수능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심하게 퇴화된 것은 학생의 잘못도 학원의 잘못도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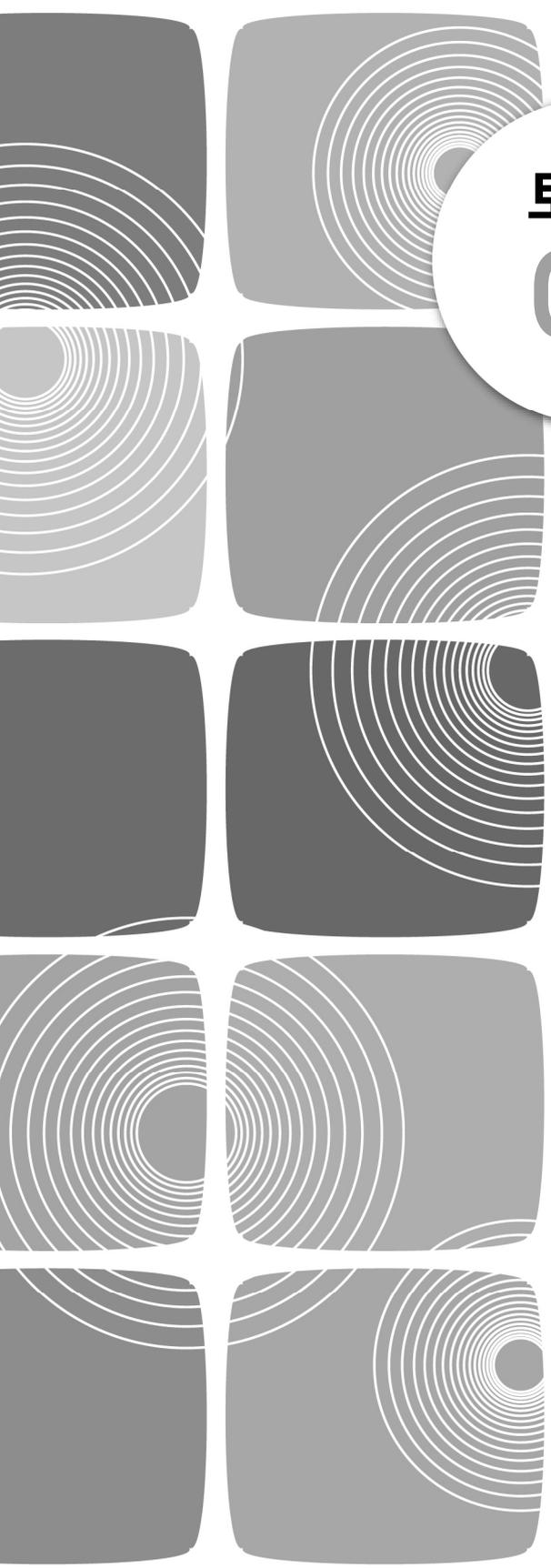
정부가 교육학적 명분을 내세우며 선택과목 수를 늘리는 바람에 좁은 범위의 내용 영역을 상대평가하려다 보니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좋은 의도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 그저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4 맺으며

수능의 선택과목 수를 계속 늘렸었던 과거의 모습처럼, 수능을 없애는 것,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돌리는 것.. 명분은 좋고 의도는 좋지만, 과연 그것이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고 정상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이상적인 주장들 앞에서 정작 교사들은 자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전문 직업적 자율성(professional autonomy)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 만큼의 지적, 도덕적 수준의 교육행위를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교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사는 천사가 아니기에, 그리고 학생도 천사가 아니기에,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교육 활동을 객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듯 교육 활동도 저질화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학생 역시도 유급이나 낙제가 없는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수능까지 없다면, 그리고 상대평가도 아닌 절대평가를 한다면,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천상천하유아독존식의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미 과거에 비해 한국의 고등학생들 중에는 그런 인격을 가진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도덕성은 나의 객관적인 수준과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합니다.

대입의 측면에서 학력 시장은 선도 악도 아니고,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고 대학이 학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 학력 시장이 대입 제도 속에서 과열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자신만의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학교교육과정과 대입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 론
03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논평

▶ 정성윤(실천교육교사모임, 교장)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논평

정성윤

(실천교육교사모임, 대구중앙중학교장 및 한국미래교육연구원 이사)



1 들어가며

- 2028년 10월 10일, 교육부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서 고교 내신 5등급제 도입과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 체계의 개편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대대적 변화가 예정되었고, 예상보다 발표가 늦어진 만큼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 모두가 기대하였지만, 최악은 피했으나 여전히 차악이란 실망의 목소리가 전해집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서·논술형 수능, 수능 절대평가 혹은 자격평가 등 근본적인 평가 역류의 원천인 수능 개선에 대하여 여러 대안이 언급되었음에도 이번 시안은 교육부가 그 허들을 적극적으로 넘지 않으려 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2 본론 하여

- 우리 헌법 31조 제4항은 「교육(교원)의 전문성」을 이미 보장

입시를 포함하여 초중등 교육 정책이나 교육과정 설계와 실행 등은 이제 교육 전문가들인 교원들에게 맡기라는 뜻입니다. 이미 그 증거는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도 잘 나타나 있는바 당장 내년인 2024년부터 초등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을 프레임으로 두고 개별 학교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설계, 실행해 나가야 하고 중등교육도 익해인 25년부터 학교 교육과정을 직접 디자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구체적 실행이 바로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고교 학점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장기적, 중대 교육과정의 본격 시행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부 발표는 ‘공정과 안정 프레임’에 갇혀 내신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선진 교육체제나 정통한 교육과정 그 어디에도 없는 원칙이자 물과 기름같이 섞일 수 없는 구성입니다.

중2 학생들 주목만 외칠 문제가 아니라 중3, 고1도.

교육부 포스터 문구처럼 ‘중2 학생들 주목’이라 되어 있지만 현재 중3과 고1은 마치 끼인 새우등처럼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어야 할지 몰라 중학교 자퇴나 재수까지 거론하는 학부모의

전화상담까지 학교와 학원가로 쇠도 중이라 합니다. 이미 이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2019년도 지난 정권에서 정시 40% 확대 조치 이후에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자퇴생이 증가하고 n수생도 늘어났습니다. 2023년 10월 국감에서 22년도 한해만 고등학교 자퇴생 수가 2만 3천 명이 넘었으며 분명 올해는 그 수가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출생 저하로 인구문제를 겪고 있는 작은 나라에서 초등학생이 미리 명문대, 의대를 준비하고 중학생이 자퇴를 걱정하며 고등학생이 자퇴와 재수를 반복하며 대학 진학 후에도 다른 대학이나 재수를 준비해야 하는 오늘날 교육 현실의 원천적 문제는 바로 입시라는 ‘수능 제도’ 자체에서 파생된 문제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원천적인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수능은 대표적인 평가의 부정적 평가의 환류(Negative washback effect)

이러한 입시의 근본 문제가 ‘수능의 부정적 평가 환류’에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킬러 문항 제거에 집중하는 모습도 자못 안타깝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가 공정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30년의 구시대적 평가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그 어떤 형태의 수능이라도 평가의 온당한 타당성과 신뢰성은 크게 확보되지 못하며 대학의 입학전형 변형만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온 국민이 벌써 경험한 문제입니다.

통합형, 융합형 수능 체제로의 개편만 이야기할 뿐, 수능의 성격 변화 등 근본적인 개혁 방안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 과목을 없애고 공통으로 배우는 영역을 시험 과목으로 한다고 했을 때, 변별력 확보라는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와 있지도 않을뿐더러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재 어떤 방향자를 제시하는지 그 예상이나 대안 등 아무런 결과물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영성한 선택 과목 유불리를 통한 변별력 확보 방안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려 쉬운 수능과 공통, 통합과목 위주의 수능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풍선효과처럼 다른 한쪽의 영역들이 부풀어 학생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사교육 의존도마저 더 높아질 것입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두 응시케 하는 방안은 학생들의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이 있고, 고1에서 학습한 내용을 2년이 흘러 고3 입시의 주요 교과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인재 선발 방안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의 실효성과 입시의 적절성을 둘 다 놓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내신 5등급제로의 변화와 논 서술형 평가 강화는 일단 환영

5등급제와 논 서술형 평가의 강화는 우선 긍정적이나 성취평가제가 집단의 서열이 아닌 개인의 발전과 성장에 초점을 둔 평가임을 전제할 때 성취 목표와 도달 그리고 성취 수준을 정해야 하는 교사의 평가 자율성이 근본적 바탕을 이룰 때 긍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교사의 논·구술 등 수행평가의 타당성과 교사의 평가 전문성은 교육과정을 관장하는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평가 기준의 표준화와 정책 설계, 각 교과목의 평가 모델과 실행 방법 등을 상세히 담은 지침을 개발하여 충분한 평가 맥락의 전이가 현장 교원들에게 이뤄지도록 한 다음 기대하거나 기대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선제적 과정이 부재하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사의 자율성이 역류되고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교육부는 고도의 교육 전문성이 필요한 평가에서 논서술형 평가를 큰 준비 없이 도입하여 지침을 24년도에나 후달하겠다는 발상은 차후 현장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고교학점제라면 상대평가 같은 절대평가 내신이나 수능은 절대 지양해야.

현재 객관식 5지선다형 위주의 내신 9등급제를 구시대적 평가 체제로 지적하고 평가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신에서 서·논술형을 강화한다는 것이, 수능 시험 문항도 변화를 예견하는 것인지가 불확실합니다. 이번 개편 시안은 수능 과목체계 개편만을 얘기하고 있을 뿐, 객관식 5지선다형 위주의 9등급제 수능은 그대로 가는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지난 정권부터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대학 입시에 대한 청사진을 여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도 않고,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으며, 현장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합니다. 과연 고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안을 마련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3 결론

고교 교사의 혁신적 평가 역량 확보를 위하여 이미 서울, 경기, 대구 등 각 지역교육청에서 실행한 혁신학교나 현재 공교육 학교 현장에서 도입 실행 중인 IB 등 선진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평가 체제에 대한 정보를 수합 분석하고 이를 공론 및 담론화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맥락으로 수정하거나 도입하여 실행적 표본과 방법을 우선 전파하면서 수능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현 방안의 문제점들이 그나마 보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진행절차

없이 막연히 선도 교원만 고교에 배치하여 교원들의 평가 역량 강화를 연수로 이어가겠다는 발상은 이미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실패 사례를 통해 교사들은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서도 여전히 학교 교육이 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우리 모두 자문해봐야 할 것이며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연동과 국가 주도적 평가의 일관성과 당위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교육부 내부에서 먼저 그 해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범국가적으로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평가의 공정성과 엄정성이란 ‘학생의 지식 이해와 역량’을 골고루 분석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50만 가까운 모든 수험생이 동시에 일시에 치르며 문제 없이 끝내는 시험을 현재는 공정성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수, 삼수생 등 여건되는 수험생들만 제 2, 3의 기회를 가지며 원하는 대학으로 출루할 수 현실의 수능은 매우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교육과정이란 시대의 목소리를 담아 인재를 키우는 지도임을 알 때 현재 우리나라는 통합형, 융합형 인재를 어떻게 선발할 수 있는지 보다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교육과정과 일체를 이룰 수 있도록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토 론
04

학생들의 입시 스트레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방기하는 대입재편안

▶ 김형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학생들의 입시 스트레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방기하는 대입재편안

김형배

(전교조 정책기획2국장)

1 입시지옥, 사교육지옥 대한민국

2022년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 진행한 학생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4.7%가 ‘성적이나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신감 상실(68.9%)’, ‘실패한 삶에 대한 두려움(57.7%)’, ‘친구와 경쟁해야 하는 고통(36.9%)’, ‘부모님과 갈등(25.3%)’라고 답했다. 입시로 인해 학생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그로 인해 생을 달리하고 있지만 책임있는 사람들은 그 체제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도 늘어만 간다. 사교육비는 매해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다. 2022년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2.4만원이다. 월급인상은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늘어나는 사교육비는 학부모들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버터내어야 하는 삶의 무게일 수 밖에 없다.

매년 2학기 고3교실은 초토화된다. ‘좋은교사운동’의 조사에 의하면 ‘고3교실 25명중 수업을 듣는 학생은 5명정도’라는 결과가 있다. 전국의 어느 고등학교를 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매년 반복되고 있다. 수시전형이 끝난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 질병등의 사유로 학교에 안 나오려고 한다.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인강을 들으며 문제를 푼다. 가정학습을 신청하여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도 상당하다. 2학기에 재학중인 고3학생들에게 학교의 의미는 무엇일까?

대입제도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2 개혁의지 상실, 대입제도 재편안

2022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는 2025년에 전면 적용된다. 그 해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2028년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28년도 대입제도는 4년 예고제에 따라 24년 2월에 발표되어야 한다. 그러한 흐름에 맞춰 지난 정부부터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논의 및 준비를 해왔다. 당초 올해 초에 발표 예정된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이 연기를 반복한 끝에 추석이 끝난 뒤인 10월에야 발표되었다. 법적으로 남은 시간은 4개월도 되지 않는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학생주도성을 강조하는 2022개정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학생의 진로희망에 따른 과목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고교학점제가 적용된다. 대입제도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교육계, 학계에서 수 없이 이야기 했다.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수 차례 개편 시안 발표를 연기했을 뿐이다.

그렇게 발표된 개편 시안을 보면 기존 체제의 재편에 불과. 별로 바꾼 것이 없다. 개편 방향의 고민과 의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수 차례 연기를 하며 시간을 끌었는지 의문이 든다. 교육부는 형식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민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의견수렴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한 국민참여위원 500명이 전부이다. 500명 여론만 듣겠다는 것이다. 전국의 수백만의 학생들과 또 수백만의 학부모들의 미래와 삶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고작 500명의 목소리만 듣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대한 형식적인 명분쌓기 용 의견수렴에 지나지 않는다. 총선을 앞둔시기에 쟁점화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시간끌기, 날치기 처리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

3 내신 상대평가절대평가 병기는 결국 상대평가로 귀결

정부는 25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은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사교육 쏠림현상, 특목고 쏠림현상, 내신 포기 학생들의 공교육 이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언급하면서 고1부터 전학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곧, 고교 3년 전 과목 상대평가, 3년 내내 모든 과목에서의 석차경쟁과 다름이 없다.

교육과정은 성취기준에 맞춰 학생들의 개인적 성취도에 따라 평가하도록 설계했으면서도 상대평가를 지속하라는 것이다. 성취도평가라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성취도에 도달한다면

누구나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은 성적 비교를 통해 석차에 따른 등급을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다 성취도에 도달했지만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평가가 시행되는 한, 학교는 등급 산출을 위해 변별만을 위한 문제를 또 만들어 내야 한다. 전교조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중등 교사 89.77%가 ‘학생 변별을 위해 어려운 문제를 출제한적 있다.’ 고 답했다. 어려운 한 두 문제로 아이들의 석차등급은 갈린다. 그렇게 달라진 석차등급이 아이들의 꿈을 바꾸고 미래를 바꾼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절대 교육적이지 않다고 수없이 이야기 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상대평가를 전 학년 전과목으로 확대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등급이 병기되어 대학에 제공될 경우 인기대학에서는 당연히 상대평가 등급을 학생 선발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절대평가가 병기된단 한들 결과적으로 상대평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로인해 내신대비 사교육과 친구들과의 입시경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신의 상대평가 단계가 완화된에 따라 대학은 학생 변별을 위해 수능을 입학자료로 더욱 중요하게 활용할 것이다. 학생입장에서는 내신과 수능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부의 개편안을 환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러한 체제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4 **공정성 명분으로 수능과목 통합. 고교학점제는 유명무실.**

탐구과목은 공통사회, 공통과목으로 제시되었다. 과목이 단순화될수록 경쟁은 치열해 질것이고 수능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기존의 수능 탐구영역 과목이었던 17개 과목은 이제 수능 과목에서 제외되었다. 주요대학 정시비율이 40%인 상황에서, 수능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은 고2~3 과목선택에서 결국 수능과 관련된 과목을 더 선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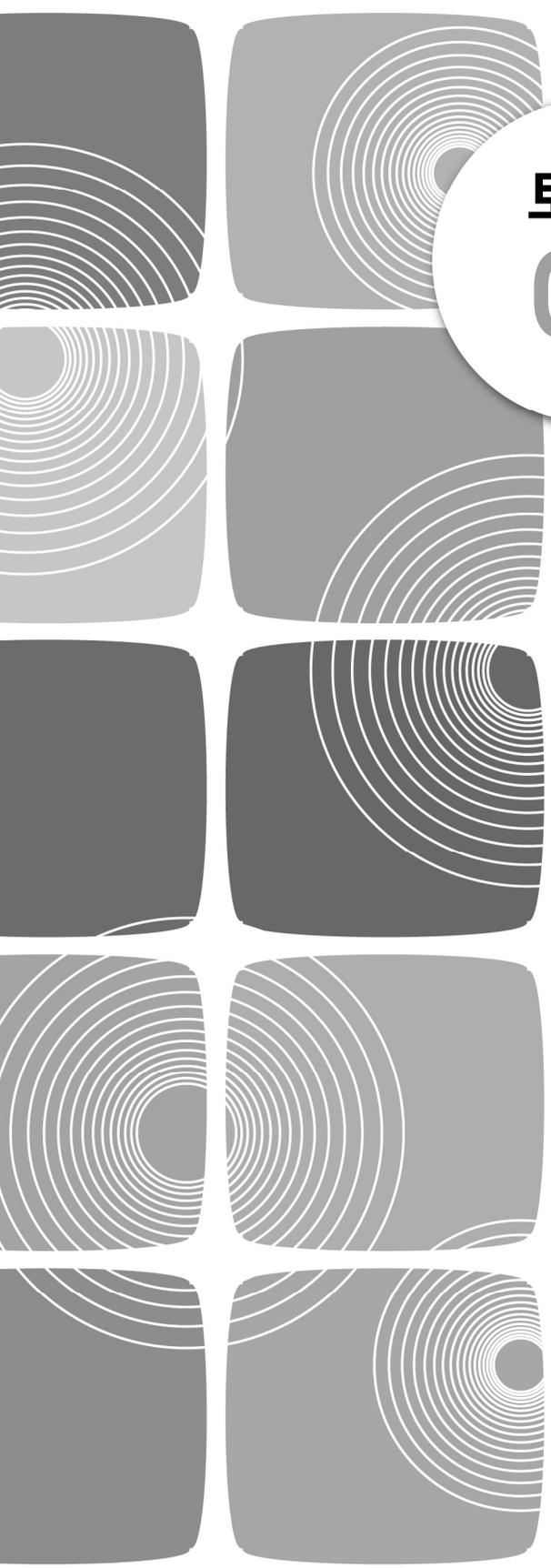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며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수능. 결국은 국어,영어,수학 인 것이다. 대입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학교들은 수능과 관련된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비중을 늘리기 시작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그 이외의 과목은 비중은 줄어든 것이다. 입시에 대한 학부모 요구가 높은 공립학교들도 그러한 변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래교육 외치지만 결국 학교 교육은 국,영,수 중심이 될 것이다.

5 4년 이면 충분. 내신·수능 절대평가화 필요

평가는 순위를 정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다. 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그에 맞게 성취도평가를 해야 한다. 내 옆의 친구를 눌러야 나의 순위가 올라가는 상대평가는 학교, 교실이라는 공동체와 어울리지 않으며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배려, 협력이라는 가치와 상반되고 학생들을 피폐하게 만든다. 끝날 때까지 1등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구조는 끝없는 사교육을 필요로 한다. 경제적 뒷받침이 튼튼한 학생들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어려운 킬러문항에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기 때문이다. 가정의 경제상황과 수능 점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수 많은 지표가 있다. 경제불평등이 교육불평등으로 전이되어 취업불평등으로 귀결되고 다시 재순환되는 고리를 끊으려면 내신·수능을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경쟁과 사교육이 일시에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학생, 학부모의 삶과 학교교육에 긍정적인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수능 설계자인 초대 교육과정평가원장도 수능이 변질되었으니 원래의 취지대로 자격시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대입시험을 절대평가로 운영한다. 의대와 같이 대학 인기학과에서의 신입생 선발 시 학생 변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한 목소리가 공정성의 요구로 변질되어 수능을 더욱 강조한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의사를 어떻게 뽑는가? 수능은 대학입학의 자격만 확인하도록 운영하고 제한된 조건 속에서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확대하면 될 일이다.

4년 남았다. 정부는 학생, 학부모 혼란을 핑계로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학생들의 입시스트레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입시·사교육 지옥을 유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능·내신이 전면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해서 28년도에 대학에 들어갈 중학생들이 혼란을 겪는다면 그 학생은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중학생들에게는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4년 전에 예고하는 것이다. 4년이면 충분하다. 입시지옥, 사교육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대입제도 개편이 절실하다.



토 론
05

'5등급제'가 아닌 '절대평가'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이치

▶ 장승진(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5등급제’가 아닌 ‘절대평가’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이치

장승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일제강점기로부터 고등교육이 기형적으로 발달해 온 이래,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입시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아니었던 적은 없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이 문제가 갖는 사회적 파장은 격이 달라졌다. 22년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우리나라 초저출산과 지역불균형의 관계에 대한 실태분석)는 출산율 문제의 핵심으로 교육 격차와 경쟁을 언급할 만큼 교육과 그 중심의 대학입시는 우리 사회의 존망을 좌우할 중대 사안이 되었다.

대학입시 문제의 심각성 이면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층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1. 대학체제
2. 대학전형
3. 대입시험

이 그것이다. 우선 격렬한 교육경쟁을 조장하는 기제는 1번이라 할 수 있다. 대중의 오해를 간단히 짚으면, 협력교육의 나라 핀란드에서도 대입 경쟁은 존재하고, 입시철에는 교육과정 파행도 일부 생겨난다. 독일의 경우도 입학정원제가 있지만 최근 아비투어 성적에 따라 합격이 좌우되는 경향이 짙다. 그럼에도 그 강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지 않는 까닭은 해당 국가들의 대학체제는 다양한 성공경로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우수한 대학의 특정 지역 쏠림을 막고 국토 전반을 활용하며, 결코 선발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상적 평가 제도를 허락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 사회는 특수지역(서울)에 온 국민이 선호 대학을 몰아놓고, 칼 같은 서열(스카이스터성한중경외시)을 유지하는 대학체제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온 국민이 여기에 진입하기 위한 신열을 앓는다. 관련 개혁 없이 2, 3번의 변화만으로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란 쉽지 않은데 떡 하나를 두고 열 명이 나눠먹어야 하는 상황 앞에, 가위바위보로 나누든 선착순으로 나누든, 사활을 걸어야 하는 세태는 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대학체제 개선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오늘의 논제인 2, 3번 개혁은 (경쟁해소에 기여하는 바도 있으나) 초중등 교육의 회복과 질 향상을 위한 전제로서 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 가령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학생들을 키워낼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지만, 2, 3번에 대한 개혁 없이는 실현할 수 없는 메시지가 된다. 개인의 성취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철저한 비교 속에서 성적이 산출되는 현재의 평가제도로는 ‘포용성’을 논할 수 없고.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는 잘못하거나 실수해도 괜찮다고 여길 수 있는 교육환경이 중요함에도 문제 하나에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뚜렷해 실수를 용납 않는 현재의 평가제도는 ‘창의성’ 교육을 논하기 어려운 구조다.

결론적으로 2, 3번 개혁의 핵심은 현재의 ‘선다형 상대평가’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의 모순이 두드러지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내신 평가방식은 교육개혁과 엇박자

- (舊시대적 평가체제) 객관식 5지선다형 위주의 내신 9등급제와 고1과 고2·3이 다른 학년별 평가방식 차등화는 전 세계에 全無
 - 세계 주요국 대부분 5등급제 평가를 실시하며, 학교 내신에서 주제 글쓰기, 보고서 평가 등 열린 논·서술형 평가 지향
 - ※ 우리나라는 시도별 고교 논·서술형 평가 권장 비중 20%~35% 수준에 불과(’22.)
 - ※ 논·서술형 문항이 학업수준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나, 학교에서 글쓰기 경험이 부족한 것이 걱정(학부모 FGI, ’23.9)
- (교육개혁에 역행) 현재 교실수업은 에듀테크 등을 활용한 학생 맞춤 교육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 *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방안(’23.2.),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3.6.) 등
 - 아날로그 시대의 9등급제, 5지선다형 평가는 사교육 반복학습을 유발해 창의력·문제해결력 중심의 수업혁신에 역행

⇒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실수업 혁신과 더불어 **평가 혁신이 중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내신 등급체계 및 평가문항구조 검토

〈그림1: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4p〉

교육부 안은 ‘세계 주요국’이라는 논거를 적극 활용하며 기존 ‘선다형 상대평가’의 부적절성을 적극 강조한다. 지난해 12월 9일 ‘고교 1~3학년 전체 내신성적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힌 장관의 말과도 결이 같다. 그러나 일본·프랑스·홍콩·호주·미국·영국·중국·독일을 망라하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창하던 교육부는 막상 결론에서 고2·3 까지 상대평가를 확대하는 이상한 안을 내어 놓는다.

- 전 세계 유일한 상대평가 9등급제를 해외 주요국*처럼 5등급 체제로 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를 반영해 학교·과목 유·불리 해소

* (미국/일본/프랑스/호주/홍콩) A~E 등 5등급, (영국) A(+)-E 6등급 등

〈그림2: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9p〉

이 과정에서는 '5등급제' 벤치마킹이라는 신선한 논리전개도 이어진다. 먼저 교육선진국들의 5등급제는 절대평가라는 전제 조건 아래 뒤따라 형성된 결과다. 벤치마킹의 핵심은 본받고자하는 대상이 지닌 탁월성의 본질적 부분을 내부에 정착시키는 것이므로, 해당 국가들의 평가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했다면 핵심인 '절대평가'를 벤치마킹해야 이치에 맞다. 그런데 교육부가 벤치마킹한 것은 부산물인 '5등급제'다. 부산물인 5등급제를 따라해 봤자 교육부가 지적한 '전 세계 유일한 상대평가 9등급제'라는 꼬리표는 '전 세계 유래 없는 상대평가 5등급제'로 이름만 달리할 뿐 변할 것은 없다. 교육부가 5등급제 도입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으나 실제로 달라진 것도 없다. '상대평가 강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 외에도 이번 교육부 안은 고교학점제와의 불일치, 수능의 영향력 확대 등 여러 모순을 일으키는데 이에 대한 지적은 앞선 발제에 담겨있어, 해석을 달리 하는 한 가지만을 추가로 논하고자 한다. 바로 '심화수학'의 존재다.

○ (추가 검토안)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

※ 과도한 사교육 유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개념 학습을 장려하는 수준으로 출제

〈그림3: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5p〉

장관은 시안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심화과목이 없어서 이공계의 우려와 인재양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반대로 고교학점제 내에서 해당과목을 소화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었다며 심화수학을 사회적 논의에 부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발제와 같이 대학들이 심화수학을 요구하지도,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도 못할 것이라 예상도 있으나, 필자는 실제 상위권 대학과 의대의 정시 전형에서는 이를 필수과목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으리라 본다. 현시점에도 수학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가지가 있으나, 실제 많은 상위권 대학들이 미적분 또는 기하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킬러문항 논란 이후 낮아진 수학의 변별력에 대해서도 대학들은 심화수학이란 잣대를 이용해 해결하려 들 가능성도 농후하다. 만약 심화수학 수능에 편성될 경우 고등학교에서는 5과목(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미적분Ⅱ, 기하) 모두를 고2, 고3에 편성해야만 한다. 고2와 고3은 총 4개 학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학기 수학 두 과목 편성이 이뤄져야 하며, 실상 3학년 2학기 이전에 학습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3개 학기에 5과목을 편성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긴다

정리하면, 앞서 2, 3번에 대한 개혁은 초중등 교육의 회복과 질 향상을 위한 전제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서는 이와 관련한 진전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때문에 앞으로도 학교 교육은 여전히 입시 교육에 종속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현재의 중2 학생들이 경험할 교육과정·수능과목은 달라질지 모르나, 정해진 답을 빨리 찾아야 하는 공부, 옆 친구와의 비교로 평가받는 교육 방식은 한결 같을 것이며, 이로 인한 입시 강도도 여전할 것이고, 대학입시문제로 신음하는 대한민국 사회도 그대로 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한다면 안을 이대로 매듭지을 수는 없다. 애초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논의가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토 론
06

상대평가 기반 대입 개편,
효과성은 떨어지고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

- 사라져가는 대학, 졸업생 취업률 급감하는 대학! -

▶ 정미라(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사)



상대평가 기반 대입 개편, 효과성은 떨어지고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

- 사라져가는 대학, 졸업생 취업을 급감하는 대학! -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54교와 선도학교 51교로 고교학점제가 시작되어 2023년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많은 교원단체들의 극렬한 반대 속에 진로학업설계,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과 같이 그동안 학교가 했어야 했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지나쳐온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다져왔다.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바로 잡기 위한 마지막 획이 2028 대입개편안이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도 무슨 속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지난 8월로 예정되어 있던 대입 개편안 발표를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왔다. 긴 기다림 속에 발표된 개편안은 공교육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추진 배경과 추진 계획이 엇박자를 이루는 기형적인 시안이었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부의 대입 개편(안)에는 정작 2022 개정 교육과정도, 고교학점제도, 미래 교육도 모두 실종되어 있었다.

1 연구도 논의도 없는 묻지마식 대입 개편(안), 2022 개정교육과정 폐기되어야 하나?

지난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설계하면서 모든 학생들의 배움을 존중하기 위해 1학년 공통과목을 제외한 모든 선택 과목에 한해 5단계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차례 보도자료로 발표하였고, 현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22년 11월 취임사에서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실제 교육부는 이미 2023년 6월 21일 보도자료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1년 기존 계획대로 고교학점제 도입('25년)에 맞춰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과목'의 석차등급 병기를 폐지하고 5단계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였다(현재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탑재되어 있음).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기존 계획을 뒤엎는 고등학교 전 학년 5단계 상대평가로 퇴보하는 대입 개편 방안이 급작스레 등장하였다. 어떠한 연구도 논의도 없이 갑자기 등장한 묻지마식 대학입시 개편방안으로 초중등교육법과 국가 교육과정까지 개정하여 전국의 교육청과 학교가 지난 6년간 막대한 예산과 노력으로 체계를 갖춰온 고교학점제는 그 시행 자체가 위태롭다.

2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만 증가시키고 대입 효과성은 떨어지는 5단계 상대평가

교육부는 9등급 상대평가로 인한 학생들의 평가 부담은 낮추고 대입 전형 연계성을 확보하겠다는 이유로 고교 전 학년 5단계 상대평가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9등급을 5등급으로 바꾼다고 하여 상대평가로 인한 평가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안은 기존에 절대평가로 평가하던 과목까지 모두 상대평가로 전환하면서 학생의 학습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숫자로 학생들의 서열화하기 위해 전 과목 문제 풀이식 지필평가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교사들의 문항 출제와 학생들의 시험 부담은 기존보다 더욱 증가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급증할 것이 자명하다.

표 1 2028학년도 내신 성적 산출 방식 변화

현행	2028학년도	변화
11%(1등급+2등급)	10%(1등급)	-1%



[그림 1] 상대평가 1등급 및 절대평가 성취도 A 비율 추정치

정착 5단계 상대평가는 1등급 인원수가 증가하지만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강조하는 변별력은 오히려 현저히 떨어져 대학의 학생 선발에는 별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더욱 치열하게 줄만 세우고 학부모는 사교육비만 더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자사고나 서울 특구 학생들에게도 별만 다르지 않을 것이다.

■ 표 2 ■ 현행 내신 성적 산출 방식과 2028 대입 성적 산출 방식 비교

	현행(주로 학년단위)* (2015 개정 교육과정)	2028년(전체 학기단위)** (2022 개정 교육과정)	변화
상대평가 (석차 등급 산출)	15 ~ 18 과목	42 ~ 45 과목	사교육비 ↑ 지필평가(문제집풀이) ↑ 학습자 주도성 ↓ 융합 수업 ↓
절대평가 (성취도 산출)	12 ~ 15 과목	9 ~ 12 과목	

* 학년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학년별 10개 과목 개설 가정(총 30개 과목)

** 학기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학기당 9개 과목 개설 가정(총 45개 과목)

오히려 성취평가제 취지에 맞춰 실시되는 기존의 5단계 절대평가 체제가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은 사범대학에서 1학년 때 수강하는 교육학을 이수한 시민이라면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수능 성적이 함께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신 성적부풀리기는 학생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취평가제와 이에 맞는 대입이 정착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상대평가 결과를 병기함으로서 오히려 성취평가제를 무산시키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미 해외 선진국은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과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한 지 오래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국가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5지 선다형에 논·서술형 지필평가를 추가하는 기존 체제를 그대로 끊임없이 반복하는 저차원적인 5단계 상대평가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치고 있는 미래사회 대비 에듀테크, 융합 교육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그에 따라 편성되는 막대한 예산을 고려해볼 때 그 의도와 추진 과정이 사뭇 의심스럽다.

3 과목 간 치열한 표준점수 갈등, 학생 시험 부담 가중으로 해소하려는 수능 개편안

킬러 문항과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한 수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입 개편(안)은 기존 수능 체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 교과 응시영역 내 과목 선택형 수능으로 불거진 치열한 표준점수 경쟁을 모든 응시생이 모든 과목에 응시하여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줄 서게 하는 방식이 주요 골자이다. 결국 표준점수에 대한 폭발적인 민원과 갈등을 학생들의 시험 부담으로 전가시켜 버린 것이다. 나머지 영역별 평가 방식과 성적 제공 방식은 현행 그대로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함으로써 여러 줄 세우기에서 ‘치열한 한 줄 세우기’로 전환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연결하는 기초 수준의 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수능 공통과목에 포함시키고 9등급 상대평가로 적용함으로써 변별력 있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킬러 문항보다 더욱 심각한 ‘괴상한’ 문항이 출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사회·과학 탐구 영역이 기초 수준의 내용이 되면서 국어, 영어, 수학 영역을 통한 변별이 극렬하게 강조될 것이고, 이에 따른 치열한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대입 개편안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및 고교학점제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교육부의 대입 개편 담당 부서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읽어보고 연구해서 제시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이로 인해 학교는 오히려 과거로 퇴보하여 더 집중적으로 수능 과목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수능 준비를 위한 문제집 풀이 수업과 평가에 몰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 과목이 모두 상대평가가 되면서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이 아닌 유리한 성적 산출을 위한 과목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형 수업 및 협력 수업을 주로 해야 하는 융합 선택 과목(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영역)까지 모두 상대평가가 되면서 학생의 성장을 촉진하는 수업이 아닌, 줄세우기식 평가를 위한 수업만이 현장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에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선택해야 할 과목을 수능 공통 출제 과목으로 제시하면서 학생의 선택이 국어, 영어, 수학의 수능 과목 중심으로 제한되도록 과목 선택의 의미를 무산시켰다. 결국 상대평가의 줄세우기 수능에서 촉발된 수능의 각종 문제점 해결의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에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으로 치장된 대입 개편안에는 정작 학생과 학부모는 없고 각자 도생해야 하는 책임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부모도 반대하고 있는 미적분Ⅱ와 기하를 포함하는 심화 수학(수능 5교시 선택)을 수능 선택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고려해야 할 여지가 전혀 없다. 수능의 수학 공통과목과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수학의 학력을 이미

파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선택과목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수능에서 추가적으로 늦은 오후 시간에 실시되는 심화 수학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학생을 문제풀이 기계로 취급하여 인권 침해를 유발할 뿐이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은가?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열 전공들은 단순히 수월한 학생 선발을 위해 앞다투어 심화 수학을 대학입시 전형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에 학부모는 더 많은 사교육비를 투입해야 할 것이고 학생은 하루 10시간 넘게 수능 문제를 풀어야 하는 서바이벌 게임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입 개편(안)은 사교육을 제외한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대학도 담지 않은 현란한 선거용 선전 도구에 불과하다. 교육은 국가 경쟁력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다. 모든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는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실현하고 공교육을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부디 기본에서 다시 출발하여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육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대입 개편(안)을 다시 마련하고 책임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해나아가야 할 것이다. 2030년 50%의 대학이 사라진다고 한다. 그리고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가 없다고 한다. 아직도 대학을 가기 위해 미래 역량을 포기하고 국영수로 줄을 서야 하겠는가? 지금도 너무 늦었다.

토 론
07

현재에 천착한 개편 없는
2028 대입 개편 시안

▶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현재에 천착한 개편 없는 2028 대입 개편 시안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교육부의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현행 대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시안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현행 유지에 방점을 찍으려면 뭐하러 개편을 한단 말인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인 것을...

이번 시안을 보고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할 것이다. 수능과 내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대학입시는 어떻게 되는거야 라고 말이다. 대학이 어떻게 전형을 설계하고 바뀌는 내신과 수능에 따라 어떤 전형 방법이 만들어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 그러니 유튜브에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검색하면 사교육계의 콘텐츠가 범람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학생 학부모는 당연히 불안하다. 중학생 대비 사과탐 학원을 등록해야 한다는 등, 초등학생 때부터 '미적분2+기하'가 범위인 수능 심화수학 대비를 위해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는 등, 고교내신 전체가 5등급 상대평가에 10%까지 1등급을 주니 치열한 내신 경쟁을 위해 중학교 때 고1 내신 과목은 끝내야 한다는 등, 고교에 가서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하니 내신대비 전문 학원 수강은 필수라는 등, 어려운 수능 기조가 계속되고 있으니 재수생들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수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 수능대비 전문학원도 필수라는 등... 사교육을 하라는 북소리로 떠들썩하다. 대입 개편 시안이 아니라 사교육 유발 요인 확대 시안이 되어 버렸다.

서두에 이미 언급했듯이 이번 개편 시안에 미래교육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다만 5등급 상대평가는 여전히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상당한 변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급감하는 학령인구에 다수 대학은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해도 대입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들려온다. 대학별로 입장 차는 존재하겠지만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에도 고교 전체 5등급 상대평가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평가 비중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물론 변별력 저하를 우려하는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입장도 존재한다. 정시 전형의 경우에 최상위권 대학은 수능과 학생부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대입을 치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대학의 입장들을 보면 이번 발표는 ‘학생부 위주(종합+교과), 논술위주, 실기위주, 수능위주’ 전형으로 짜여진 현행 대입제도를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은 무엇 때문에 해야만 했는가? 고1에 공통 과목을 통해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학교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2학년과 3학년에는 ‘일반+진로+융합’ 선택 과목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부터 도입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개편 시안이 확정된다면 고교학점제는 불가능하다.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일반선택 과목부터는 학생 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수능 국어, 영어, 수학에는 일반선택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수능 국어 영역 범위로 지정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은 일반선택 과목이다. 수학 영역의 ‘대수, 미적분1,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이다. 수시에서는 최저학력기준, 정시에서는 수능 100%로 대학입시가 치러지는 구조에서 수능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 따라서 현행 수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선택과목 왜곡현상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교학점제는 불가능하다. 더 심각한 것은 심화수학 신설이다. 만약 최상위권 대학이나 ‘의치약한수’, 이공계열에서 심화수학을 응시 영역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최상위권+이과 학생들은 진로선택 과목인 ‘미적분2+기하’를 필수로 들어야 한다. 이때 고교는 이 두 과목을 개설해야만 한다.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수학만 5과목을 개설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첨단과학 인재가 배워야 할 ‘인공지능 수학’같은 과목은 개설조차 할 수 없다.

교육부의 개편 시안에는 사교육비 증가를 막기 위한 이렇게 결정했다는 수사가 여러 차례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개편했기 때문에 사교육이 증가한다. 아니 폭증한다. 교육부는 ‘고1 상대평가+2•3 절대평가’안이 중학생 사교육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학년 상대평가로 전환한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학년 5등급 상대평가로 하기 때문에 고교과정 대비를 위한 중학생의 선행학습 사교육에 3년 내내 10% 안에 들기 위한 고등학생의 내신대비 사교육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사과탐 공통과목 체제가 선택과목 왜곡 현상은 막을 수 있겠지만 5등급 상대평가와 상대평가 수능 경쟁에 뛰어들어야 할 현재 중2 이하 학생들에게는 중학생 때 수능 사과탐을 끝내고 가야 한다는 신호를 주어 사교육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미적분2+기하’로 구성된 심화 수학의 경우는 더 참담하다. 지금도 의대에 가려면 어려운 미적분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의대반 학원에 가야한다는 상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미적분2’보다 더 어려운 ‘기하’를 둘 다 수능에 포함된다고 보면 사교육의 마케팅은 더 일찍 더 많은 반복을 해야 한다는 전략을 내세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육부의 2028 대입 대편 시안은 현행 대입제도가 운영되도록 설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고교학점제는 불가능하고 사교육은 폭증하고 중2 이하 학생들의 학습 고통은 가중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가정 경제를 뒤흔들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초저출산은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될 것이고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발원지가 되어야 할 학교는 한물간 지식을 암기하는 소각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개편 시안이 최종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형식적으로 키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절대로 교육부의 시안을 그대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수능과 고교내신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이 필요하다. 수능 심화수학 신설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의 대입 개편 시안에서 언급하지 않은 대입전형의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는 제시되어야 한다. 발제자가 언급한 것처럼 절대평가로 전환된 ‘수능+학생부+면접’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변별력 문제는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이다.

토 론
08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의 쟁점

▶ **주종한**(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관)



교육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의 쟁점

주종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2팀장)

1 시작하는 글

교육부가 10월 10일(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하 ‘2028 대입개편 시안’ 또는 ‘시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한다고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시안은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①수능 시험과 ②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라고 하였다. 실제 시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선택과목 폐지)하여, 과목 선택의 유·불리를 해소하고 수능 ‘공정성’ 확보
- 사회·과학 통합 응시로 벽을 허물고, 융합적 학습 유도

② 이권 카르텔 근절

- 공정한 수능을 위해 출제관리 전(全)단계에 걸쳐 카르텔 유발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

③ 고교 내신 5등급 체제로 선진화

- 내신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고 1·2·3 동일한 평가체제로 개편
- 내신평가 혁신으로 9등급제 폐지, 5등급제 도입

④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 미래사회 대비, 지식 암기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학생 역량과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 확대 등 혁신
- 개별 학생마다 성취한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내신 절대평가 신뢰도 제고
-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

이 중 <② 이권 카르텔 근절>은 수능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고, <④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는 내신평가의 공정성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조치로 이해할 때 결국 핵심은 ①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제로 개편과 ③ 고교 내신 5등급 체제로 선진화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로 이번 시안의 제목¹⁾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느냐는 것이다.

2 미래 수능, 여전히 줄세우기 관참은가?

교육부의 발표 자료 중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기존 수능은 ‘분절적 과목 체계로 인한 불공정 유발 및 통합·융합교육 저해’한다면서 수능 선택과목의 불공정과 과도한 고교 내신과목 쪼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능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통합적·융합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 과목체계 재구조화 검토를 제시하고 있다. 국어와 수학을 선택 없이 공통 교과로 시행하고, 탐구영역도 공통사회, 공통과학으로 통합하였으며 제2외국어와 한문 이외에 심화수학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와 함께 공정 수능을 위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도 함께 제시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기존의 틀을 유지하며 과목체계만 바꾸었을 뿐 평가체계나 평가 문항에 대한 언급은 없다. 수능과 대입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시선을 고려했을 때 큰 변화를 도모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하지만 30여년 동안 지속되어 온 현 수능 체제가 지속될 경우 학교는 모든 교육활동이 대입으로 귀결되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교실 수업은 여전히 문제풀이식 수업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고, 교실 수업 개선이나 교육과정 정상화 등은 여전히 먼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학교 교육의 파행으로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자기주도성, 창의력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키우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3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와 상대평가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1등급 경쟁을 완화한다고 상대평가로 5등급을 산출한 후 이것을 성취도 A~E 옆에 병기한다고 합니다. 결국 전 학년 상대평가 체제로 가는 셈이지요. 잘보면 기존 9등급제가 5등급으로 재편된 것일 뿐 절대평가라는 가면을 쓰고 결국 전과목

1) 2023.10.10. 교육부 발표 시안의 제목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임

전학년 상대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성취기준에 근거한 평가는 물 건너갈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 이후 현직 교사의 반응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인의 진로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며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참여형 수업을 늘리면서 수준별, 희망 진로별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상대평가 제도 하에서 고교학점제가 운영되면 각 과목별로 유·불리 편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수강 인원이 적어질수록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지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은 수강 신청을 기피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보다는 대입시 내신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편 시안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8 대입제도하에서 고1 학생과 고2·3 학생의 내신 평가 방식의 다름과 고2·3 ‘성적 부풀리기’ 우려로 내신 변별력 저하 등 대학에서의 학생 선발 문제 등을 우려 삼아 다시 상대평가로 회귀하고 말았다.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운영도 함께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선발에 휘둘러야 하는지 고민이 깊다.

4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개선 방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9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중장기 대입 개편 방안」에 관한 대입제도 개선 연구를 시행하였고, '23. 7. 20. 경기도에서 개최된 91회 총회에서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2028 대학 입시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수 차례 업무 담당자 회의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8 대입제도 개선 방안 제안

I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 학점제 시행에 적합한 새로운 대입 정책의 필요성 대두
- 2022 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교육부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임박
- 제9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3.7) 교육의제 토의 및 교육부에 개선 방안 제안 결정

2. 현황 진단

- 3학년 1학기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만으로 수시전형 지원 및 정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준비 등으로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파행 고착화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 발표 이후 주요 대학의 정시 전형 확대로 수능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저해
- 대학 수학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수능이 변별력에 초점을 맞추어 상대적 서열화를 위한 시험으로 변질되어 초고난도 문항을 풀기 위한 사교육 유발 및 N수생 양산

3. 추진 목적

- 2022 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2028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도모
-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관련 17개 시·도교육청 의견 제안을 통해 상호 협업 분위기 조성

II 기본 방향

- 수능과 대입제도 운영 등은 대학, 교육부의 주도하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방향으로 추진(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운영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충실)
-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교학점제 안착 등을 위해 큰 폭의 변화

III 제안 내용

1. 대학수학능력시험

- 절대평가로 운영(5단계, 9단계 등)
 - 2022 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 변화 반영
 - 학생 맞춤교육을 위한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성적에 따라 줄세우기를 하는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불일치 해소
 - 학생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의 최소화
- ※ 단, 절대평가의 단계는 수능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현장 의견, 전문가 견해 등을 반영하여 5단계, 9단계 등으로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절대평가의 신뢰성 및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점진적 도입(과도기로 5단계 상대평가 등)도 고려
- 문항 난도 적정 수준 하향
 - 핵심역량, 고교별 성취기준에 기반한 교육과정 성취 정도 및 대학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본래 취지에 충실
 - 현행 대입제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도한 영향력 축소
 - 일부 상위권 대학 학생 선발을 위한 초고난도 시험문제 출제에 따른 과도한 입시 경쟁 및 사교육비 문제 해결

□ 서·논술형 평가 문항 도입(중·장기 과제 검토)

- 산업 및 사회 변화 주도를 위해 학생의 논리적·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향상
 - 토론, 글쓰기 등 교실수업 개선 기여
 - 수능 취지에 비춰 5지선다형 평가 문항의 한계 해소
- ※ 충분한 연구를 통해 국어 등 필요 교과에 일정 비율 이내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되 서·논술형 시험의 평가 공정성, 사교육 유발 요소 예방책 마련, 적정 평가 도구 개발 등에 대한 연구도 선행되어야 함

2. 대입 전형

□ 수시와 정시 전형 통합 운영

- 현재 파행을 겪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정상 운영
- 수능(11월 초·중순 시행) 이후 통합 운영(3학년 2학기 성적 등 대입에 반영)
- 대학 입학정원 대비 학생 수 감소와 전형 다양화 등으로 현행 수시와 정시 분할 모집 실효성 감소

□ 전형 방법 간소화(학생부 위주, 수능 위주)

- 지나치게 복잡한 전형 방법으로 인한 혼란과 과도한 비용 해결
- 학생부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으로 간소화하되 전형 요소, 반영 비율 등은 전문 기구 논의 혹은 대학에서 자율로 결정. 다만 전형 요소 중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대학별 본고사, 논술 등은 배제

3. 학교생활기록부

□ 학생부 기재 제한 완화

- 고교학점제 취지 부합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실화에 기여
 - 학교교육계획 및 교과교육과정에 따라 시행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예: 독서, 동아리활동 등)을 충실하게 반영 기재
- ※ 영역별 학생부 작성 분량, 대입 반영 영역 등에 대한 세심한 논의 필요

□ 대입 전형에 학생부 반영 확대

- 교사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하여 평가권 보장과 신뢰도 확보 노력 병행 필요
-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전제로, 대학이 학생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5 마치며

우리 사회에서 주택문제와 교육문제가 풀기 어려운 이유는 두 문제 모두 우리의 욕망, 즉 현재의 욕망과 미래의 욕망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출생 자녀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어느 대학을 졸업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직업과 삶이 달라지는 우리의 현실에서 대학입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렇기에 대입제도의 새로운 변화에는 언제나 진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교육부 시안에도 많은 고민의 흔적은 묻어난다. 수능의 공정성 문제, 수능의 과목별 유·불리 문제, 수능의 전면 개편 여론, 1학년 내신만 상대평가로 될 경우 학업 중단 가속화 우려, 고교학점제와 절대평가의 모순, 사교육 유발 우려 등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고, 어떤 문제들은 상호 충돌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좀 더 원칙에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아이들의 행복과 올바른 성장,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에 기여, 국가의 장기적 발전 등이 그것이다. 더 이상 획일적 출세우기식의 평가 체제(수능과 내신 모두)를 고수한 채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도, 대학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더 이상 곤란하다.

이제 남은 절차는 대국민 공청회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 수렴뿐이다. 그러나 흐름상 큰 폭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그래도 더 열린 자세로 듣고 한 발이라도 전진하려는 노력을 기대해 본다.

토 론
09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 정성훈(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과장)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2023. 10.

교 육 부

목 차

I. 추진 배경 및 방향	1
II. 현황 및 문제점	2
III.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5
① 통합형·융합형 수능과목체제로 개편	5
② 이권 카르텔 근절	7
③ 고교 대신 5등급 체제로 선진화	8
④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9
< 예상되는 기대 효과 >	10
IV. 향후 로드맵	11
[붙임] 1.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보통교과	
2. 그간의 경과	
3. 내신 평가방식 및 대입제도 해외사례	
4. 학부모 대상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 추진 배경 및 방향

□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열쇠는 수능과 내신

- 대입제도는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면서, 학생·학부모·고교·대학 모두 예측 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
- 대입의 핵심은 ①수능 시험과 ②고교 내신(학생부), 두 개의 큰 축이 학생의 미래 대비와 대학의 인재 선발을 균형있게 지원할 필요

□ 수능은 '공정성'에 집중하면서 바람직한 교육적 변화 유도

- 평가의 기본적 가치는 '공정성', 수능시험에서 그동안 제기된 불공정을 개선하여 수능시험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 필요
 - * 지속 강조 필요한 고등교육정책 1순위 :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25%)(2022 KEDI POLL)
- 미래사회에서는 통합적·융합적 인재가 필요, 수능의 교육적 위상을 고려하여 공교육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기 위한 수능체제 검토
 - 정부는 수능 개편을 통해 공정평가 기반 확립 및 교육개혁 유도

□ 미래 사회에 맞지 않는 고교 내신평가의 근본적 혁신 필요

- '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이 예고('21.2)되어, 학점제로 공부하여 2028 대입을 치를 학생들(現 중2)의 고교 내신에 대해 검토
 - 정부는 예측가능성을 위해 과거 학점제 추진계획('21.2) 상 내신 평가방식을 유지한 바 있으나, 내신평가에 대한 우려 지속*
 - * 고1 사교육 내모는 학점제('23.8.15. 파이낸셜), 고2·3 절대평가...특목고 쏠림 우려('23.6.21. 채널A)
- 교실수업은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디지털 기반의 교육개혁('23.2)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만, 내신평가의 혁신 속도는 다소 지연

- ◆ (수능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고, 통합적·융합적 교육을 유도
- ◆ (고교 내신) 교육개혁·교실수업 혁신에 발맞춰 내신 평가방식 혁신

II. 현황 및 문제점

□ 분절적 과목 체계로 인한 불공정 유발 및 통합·융합교육 저해

○ (수능 선택과목 불공정) 기존의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 등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 적성·역량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을 저해

- 경제·물리학 등 다양한 과목보다는 높은 표준점수 확보에 유리한 특정 과목들로 쏠림* 유발

* 지구과학 I(33.7%) vs 물리학II(0.6%), 생활과 윤리(32.9%) vs 경제(1.1%)(2023 수능)

※ 고교교사,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진로와 무관하게 점수 취득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고 있음"(대입개편 전문가포럼, '23.2)

-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다른 표준점수를 받게 되어, 학생·학부모 혼란 및 불공정하다는 인식 확산

※ 고교 교사 36%, 수능에서 '국어·수학 선택과목' 수정·보완 필요 응답('23. 대입정책 의견조사)

※ 실력과 관계없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 피해...유리한 과목에 쏠릴 것(학부모 FGI, '23.9)

- 수능 선택과목 체계를 유지할 경우, '25년 다양한 과목 선택을 적극 권장하는 학점제 하에서 수능 유·불리 논란이 심화 예상

○ (과도한 고교 내신과목 쪼개기) '25년부터 교육과정 이수 기준이 '학년' 기준에서 '학기' 단위로 바뀌어 과목이 잘게 세분화*

* 예시 : (현행) 물리학II(1과목) → (2022 교육과정) 전자기와 양자, 역학과 에너지(2과목)

- 개별 과목만으로는 교과 영역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통합적·융합적 사고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양이 곤란

- 세분화된 고교 교육과정을 수능 과목에 반영 시, 학생·학부모 과목선택 혼란 및 출제·관리 상 안정적 운영에도 한계

※ 수능만큼은 공통으로 공정하게 시험보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수능 과목을 계속 쪼개고 나눠서 오히려 선택의 폭이 좁아진 느낌(학부모 FGI, '23.9)

⇒ 수능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통합적·융합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 과목체계 재구조화 검토

□ 수능 시험에 사교육 카르텔 침범,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개요

- (사교육 유착) 학원과의 유착으로 인해 그간 킬러문항 출제, 과거 수능 출제·검토위원 중 고액 영리행위자* 등 카르텔 확인
 -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23.9.19.), 교원 사교육 영리행위 자진신고 결과 확인된 수능 출제 관련자 24명 고소 및 수사의뢰
- 수능 공정성 확보를 위해 카르텔 소지를 원천 차단할 필요

⇒ **공정수능** 실현을 위해 '킬러문항 배제'를 넘어 수능 출제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카르텔·부조리를 철저히 근절 추진

□ 9등급제 기반의 학점제 도입 시 2025년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 예상

- ※ 기 예고(21.2) : '25년부터 고1(공통과목) 9등급 상대평가 + 고2·3(선택과목) 전면 절대평가(성취평가)
- (학년별 다른 평가방식) 고1과 고2·3 각각 내신 평가방식이 달라, 9등급제인 고1 내신이 대입에 더 중요해지는 불공정 발생
 - 심화내용을 배우는 고2·3은 '성적 부풀리기'*로 내신 변별력 저하, 대입에서 학생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은 고1 내신에 영향 집중
 - * 현재 부분 시행 중인 내신 절대평가 모니터링 결과, A등급 비율 정상 범위보다 높음 → 정상분포 추정 시 10% vs 일반고 22%, 외고 48%, 과학고 59%, 자사고 33%(평가원, '22.)
 - 고1 내신 성적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고2·3 수업 참여 동기 상실, 수능 준비를 위한 학업중단(자퇴)이 가속화될 우려*
 - * 고1 학업중단을(일반고) ('20.) 1.5% → ('22.) 2.3%, 검정고시자 수능 응시 ('19.) 1.9% → ('24.) 3.6%
 - ※ 결국 1학년 공통과목 성적이 중요... 사교육 경쟁·의존이 늘어날 것(학부모 FGI, '23.9)
- (교실 황폐화 9등급제) 학령인구 감소로 1등급(4%) 인원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내신 9등급제는 과도한 경쟁을 조장
 - 9등급제는 교실 내 소모적 경쟁과 이로 인한 과잉 사교육을 유발* 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협업능력·공동체의식과 상충
 -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고1) 49.1 > (고2) 47.0 > (고3) 41.9('22. 사교육비조사)

- '1등급'이 안 나오는 농어촌 등 소규모학교*와 적성·흥미를 고려한 소인수과목은 원천적으로 내신 불리 → 특정 학교·과목 소외

* 전국 43개 고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1등급 '없음', 고교의 40%가 학년당 학생 200명 미만('23.)

- (대입전형 연계 미흡) 내신이 학생의 고1~3 시기 노력과 역량을 반영하지 못하면 대학은 고교 내신 중심의 학생 선발에 한계*

* 교사·입학사정관, 내신 절대평가 시 학생부교과전형 운영 곤란 예상(정책연구 FGI, '22.12)

⇒ 내신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예상되는 2025년 현장 혼란을 예방하고, 학생의 성장·발달을 이끄는 교육 혁신을 위해 내신 평가방식 재검토

□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내신 평가방식은 교육개혁과 엇박자

- (舊시대적 평가체제) 객관식 5지선다형 위주의 내신 9등급제와 고1과 고2·3이 다른 학년별 평가방식 차등화는 전 세계에 全無

- 세계 주요국 대부분 5등급제 평가를 실시하며, 학교 내신에서 주제 글쓰기, 보고서 평가 등 열린 논·서술형 평가 지향

※ 우리나라는 시도별 고교 논·서술형 평가 권장 비중 20%~35% 수준에 불과('22.)

※ 논·서술형 문항이 학업수준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나, 학교에서 글쓰기 경험이 부족한 것이 걱정(학부모 FGI, '23.9)

- (교육개혁에 역행) 현재 교실수업은 에듀테크 등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방안('23.2.),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3.6.) 등

- 아날로그 시대의 9등급제, 5지선다형 평가는 사교육 반복학습을 유발해 창의력·문제해결력 중심의 수업혁신에 역행

⇒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실수업 혁신과 더불어 평가 혁신이 중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내신 등급체계 및 평가문항구조 검토

Ⅲ.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1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선택과목 폐지)하여, 과목 선택의 **유·불리**를 해소하고 수능 '**공정성**' 확보

◆ **사회·과학 통합 응시**로 **벽을 허물고, 융합적 학습** 유도

○ (**통합형 과목체계 도입**)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정하고 단순하게 점수 부여

- 교육과정 중 일반적으로 개설되고 분야별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 위주로 출제, **현행 수능과 학습량 동일**(고교수업 기준 8과목)

* (국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영어) 영어 I·II

○ (**추가 검토안**)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 II+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

※ 과도한 사교육 유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개념 학습을 장려하는 수준으로 출제

○ (**융합적 학습 유도**)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모두 선택과목 없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사회·과학**에 동일하게 응시*

* 2개 모두 응시. 단,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시험시간과 점수는 분리

- 교육과정 중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출제해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 평가

- 개별 과목에 한정된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 **변별력** 유지

※ 직업탐구 영역은 유지하되, 모든 전공 공통인 '**성공적인 직업생활**' 출제

◇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과목만 조정**

◇ **영역별 평가방식** 및 **성적제공 방식**은 안정성을 위해 **현행 유지**

◇ **EBS 연계**는 **현행 유지(50% 간접 연계)** : **연계 체감도가 높은 출제**로 공교육 및 EBS 중심 수능 준비 지원

<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 요약 >

영역	현행 (~2027 수능)	개편안 (2028 수능~)
국어	<p>공통 + 2과목 중 택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독서, 문학 • 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p>공통</p> <p>(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p>
수학	<p>공통 + 3과목 중 택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수학 I, 수학 II • 선택: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p>공통</p> <p>(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p>
영어	<p>공통</p> <p>(영어 I, 영어 II)</p>	<p>공통</p> <p>(영어 I, 영어 II)</p>
한국사	<p>공통</p> <p>(한국사)</p>	<p>공통</p> <p>(한국사)</p>
탐구	<p>17과목 중 최대 택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9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과학: 8과목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공통 (통합사회) • 과학: 공통 (통합과학)
	<p>1과목: 5과목 중 택 1</p> <p>2과목: 공통 + [1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 선택: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제2외국어/한문	<p>9과목 중 택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외국어/한문: 9과목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I 	<p>9과목 중 택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외국어/한문: 9과목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추가 검토안</p> <p>10과목 중 택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외국어/한문: 9과목 • 심화수학: 1과목 (미적분 II + 기하) </div>

※ 음영표기는 “절대평가” 적용 영역

2 이권 카르텔 근절

◆ **공정한 수능**을 위해 **출제관리** 3단계에 걸쳐 **카르텔 유발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

	현행	개선
① 위원풀 구성	체계적인 관리 미흡	→ 자격기준 강화
② 위원 선정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약서 등 자진 신고에 의존 ▪ 인위적 개입 가능성 존재 	→ 선정 전 과세정보 확인 무작위 추첨 선정
③ 출제 이후	'참여경력 노출'만 금지	→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

- **(위원풀 구성)** 학원에 문항 등을 판매한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원천 배제 되도록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자격기준 강화
 - ※ 자격기준 등을 교육부 훈령으로 정해 관리 강화('23.12, 수능 관리규정 제정)
- **(위원 선정과정)** 출제·검토위원 선정 시 검증된 인력풀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학연·지연·친분 등 카르텔 개입 예방
 - 출제·검토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에 대한 허위신고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과세정보 확인***('23.下~, 고등교육법 개정)
 - * 국세청에 수능·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의 기타소득 등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
- **(출제 이후)** 출제 후 5년간 수능·모의평가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23.下~, 고등교육법 개정)

◇ 입시비리 집중 점검·적발 을 위해 교육부 內 전담팀 운영('23.下~, 기존 관련 대책팀과 통합 운영)
◇ 고의적·조직적인 중대 입시비리 발생 시, 해당 대학에 즉시 정원 감축 등 엄정 처분 ('23.下~,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③ 고교 내신 5등급 체제로 선진화

- ◆ 내신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고 1·2·3 동일한 평가체제**로 개편
- ◆ **내신평가 혁신**으로 **9등급제 폐지, 5등급제 도입**
 -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를 시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상대평가 병기)

○ **(등급 구분기준 개선)** 학생들을 극도의 경쟁으로 몰아넣어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내신 9등급제 →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

* 1등급(10%) - 2등급(24%, 누적34%) - 3등급(32%, 누적66%) - 4등급(24%, 누적90%) - 5등급(10%, 누적100%)

- 고1 '내신 전쟁' 및 과잉 선행 사교육을 유발하는 9등급제 대신 5등급제로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협력학습** 유도

- 전 세계 유일한 상대평가 9등급제를 해외 주요국*처럼 5등급 체제로 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를 반영해 **학교·과목 유·불리 해소**

* (미국/일본/프랑스/호주/홍콩) A~E 등 5등급, (영국) A(+)-E 6등급 등

○ **(선택과목 절대·상대평가 병기)** 절대평가(A~E)를 하면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예체능 등 제외)

- 고교 전 학년(1·2·3학년)에 **일관된 평가**(절대평가+상대평가 5등급 병기)를 하여, **학년별 평가방식 차등화**로 인한 혼란 방지, **공정성 확보**

- 대입에 필수적인 **변별력**을 확보하며, 대학에 **다양한 성적·통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평가 자율성** 지원

<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안) >

구 분		절대평가		상대평가	통계정보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
보통 교과	공통과목	○	A·B·C·D·E	5등급	○	○	○
	선택과목 (일반·진로·융합)	○	A·B·C·D·E	5등급	○	○	○
전문교과		○	A·B·C·D·E	5등급	○	○	○

※ 예체능, 과학탐구실험, 교양과목은 석차등급 미산출

4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 ◆ 미래사회 대비, 지식 암기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학생 역량과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 확대** 등 **혁신**
- ◆ 개별 학생마다 성취한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내신 절대평가 신뢰도 제고**
- ◆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다양한 평가방식 확산)**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5지선다형)는 지양,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 강화***
 - * (현행) 내신 논·서술형 문항 출제 관련 기준 미미 → (개선) **논·서술형 문항만으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2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 **(절대평가 안착 지원)** 개인별 성취수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학생 맞춤 교육을 위해 **절대평가를 지속 내실화**
 - 교육과정 과목별 구체적인 성취수준 도달 정도를 **표준화한 국가 수준 평가기준** 개발·보급(~’24.上)
 - 국가·시도 평가관리센터 중심으로 전체 고교의 **평가현황 점검** 및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 개발·보급**(‘24.上~)
 - 교과별 수업 및 **평가 운영계획·방법** 등 **정보공시 상세화***
 - * (현행) 교과별 최소한의 평가계획 제공 → (개선) 교과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방법 등 상세 정보에 대해 공시 (~’23.12.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및 표준서식 개발)
- **(全体教师 역량강화)** 모든 고교 교사의 **혁신적 평가역량 확보**(‘24.~’25.)
 - 집중적으로 양성된 **수업·평가 전문성이 높은 핵심·선도교원** (3,000여명)이 **1인 1고교 전담**으로 **평가역량 강화 연수** 진행
 - **교사 연구대회·학습공동체** 등 현장의 **자율적인 연구·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가방식 고도화** 촉진*
 - *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활성화, 에듀테크·수업평가 연구회 등 지원(~’27. 840개)

< 예상되는 기대 효과 >

◆ **통합형 수능 도입과 함께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고교 교실을 황폐화 시키는 내신 9등급제를 폐지하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 학생·학부모 “믿을 수 있는 대입·내신 평가와 의미 있는 고교 생활”

※ 학부모 사전 설문조사 결과, 내신 절대평가·상대평가 88.6% 동의, 5등급제 76.6% 동의, 수능 통합형 과목체계 73.0% 동의 등 시안 내용에 대해 긍정 기대(온라인 설문조사, '23.10)

- ‘킬러문항’ 배제로 공교육 내에서 준비할 수 있으면서, 사교육에 유착되지 않은 정정당한 문제가 출제되는 건강한 수능
- 고교 3년간 열심히 공부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고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이 수능 융합평가로 연결 → 학교교육 중심의 공정한 평가
- 고1 내신이 불만족스러워도 고2·3 때 만회·재도전 가능, 고1 과잉 내신전쟁 방지 → 9등급제로 인한 지나친 내신 사교육 경감
- 친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부담 완화 → 미래 사회 역량인 협업 능력·공동체의식 함양, 인성과 학업능력이 조화된 전인적 발달

□ 고교·교육청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공교육 정상화”

- 내신과 수능에서 학교·과목 간 유·불리 완화 → 점수 받기 유리한 학교·과목으로의 쏠림 해소, 안정적인 학교 운영
- 고1~3 일관된 평가로 학생들의 고1 이후 대거 학업중단(자퇴) 또는 수능 집중 현상을 방지해 면학분위기 유지, 공교육 정상화

□ 대학 “융합형으로 학습한 미래 인재를 내실 있게 선발”

- 수시·정시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학생부교과전형 등 현행 대입전형 구조가 큰 변화 없이 유지 → 대학 혼란 최소화
- 다양한 내신정보(절대·상대등급) 제공 → 대학의 평가 자율성 확대
- 고교 내신 평가에서 대학 공부에 적합한 논·서술형 평가 확대 →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대학 진학, 원활히 적응

IV. 향후 로드맵

□ 2028 대입개편 시안 논의 · 확정

- 대입개편 세부내용에 대한 현장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 경청
 - ※ 대국민 공청회 개최 예정(잠정, 11.20. 14:00 서울 여의도 인근)
-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 개편안 확정

□ 대학 혁신 등을 반영한 대입 개선의 단계적 모색

- 대학혁신의 흐름*에 맞춘 대입 개선 논의를 위해 대학이 주도하는 (가칭)대입전형 운영 협의회 운영('24.上~)
 - * 대학의 벽 허물기(학생 중심의 전공체계), 지역 혁신 인재 양성, 글로벌 유학생 유치 등
 - 정부는 협의회가 제안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하고 지원
- AI를 통한 공공 차원의 대입정보 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 디지털 기반 원서접수 개선, 수능학습 지원 등 다양한 과제도 발굴('24.上~)

□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미래형 대입제도 구상 · 논의

-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2026~2035)」 수립* 시(~'25.3), 대학입시제도 등 중장기 발전방향 포함
 - * 일정(안) : 미래세대 가치·키워드 발굴, 교육비전 및 방향 설정(~'24.3) → 국가교육 발전계획 시안(초안) 수립(~'24.9) →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 수립(~'25.3)
- 교사의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논·서술형 대신 평가의 혁신이 대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는 선진적 대입기반 구축 지원
 - ※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계기관에서 제안하는 대입 관련 이슈를 면밀히 검토

붙임 1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보통교과**

※ □ 2028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에 따른 수능 출제과목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국어	공통국어1 공통국어2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 의사소통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언어생활 탐구
	공통수학1 공통수학2 기본수학1 기본수학2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II,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수학과 문화, 실용 통계, 수학과제 탐구
영어	공통영어1 공통영어2	영어 I, 영어 II,	영미 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심화 영어,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기본영어1 기본영어2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직무 영어	
사회 (역사/ 도덕 포함)	한국사1 한국사2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정치, 법과 사회, 경제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국제 관계의 이해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통합사회1 통합사회2			
과학	통합과학1 통합과학2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시스템과학, 행성우주과학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과학탐구실험1 과학탐구실험2			
제2외국어 /한문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독일어 회화, 프랑스어 회화, 스페인어 회화, 중국어 회화, 일본어 회화, 러시아어 회화, 아랍어 회화, 베트남어 회화 심화 독일어, 심화 프랑스어, 심화 스페인어, 심화 중국어, 심화 일본어, 심화 러시아어, 심화 아랍어, 심화 베트남어	독일어권 문화, 프랑스어권 문화, 스페인어권 문화, 중국 문화, 일본 문화, 러시아 문화, 아랍 문화, 베트남 문화
		한문	한문 고전 읽기	언어생활과 한자

붙임 2

그간의 경과

-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확정**(’22.5)
 - ※ [82-1]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사회적 협의에 근거해 대입 개편,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제고 역할 강화,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 마련
 - ※ [82-2]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추진: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 점검 및 보완방안 마련, 성취평가제 및 미이수제 내실화 방안 마련
- **고교학점제 점검 TF 운영**(총 5회, ’22.7~’22.11)
 - ※ 교장·교사, 교수, 입학사정관 등 현장 전문가(12명) 대상 학점제 주요 제도 점검
- **대입정책자문회의의 구성·운영**(총 5회, ’22.8~’23.10)
 - ※ 고교·대입 관계자, 언론, 학계·기업 등 전문가(21명)가 바람직한 대입방향 자문
-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 및 토론회 개최**(총 3회, ’22.8~’22.10)
 - ※ (’22.8.11.) 평가 및 책임교육 / (’22.8.26.) 대입전형 / (’22.10.13.) 소규모학교 지원
- **성취평가제 운영 내실화를 위한 현장 의견수렴**(총 3회, ’23.2~6)
 - ※ 교육청, 교사 등 현장 전문가, 대학 입학사정관 등 참여 대상별 종합 의견 정리
- **대입제도 개편 시안 개발 정책연구 시행**(’22.10~’23.7)
 - ※ 대학 입학업무 관계자, 고교 교사 대상 FGI 등 의견수렴 포함
- **대입개편 전문가포럼 개최**(총 4회, ’22.10~’23.2)
- **대입정책에 관한 의견조사 시행**(’22.11~’23.2)
 - ※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 대상 대학입시 인식 파악(총 8,808명 참여)
- **내신 공통과목 점수체제 정책연구 시행**(’23.4~5)
 - ※ 교육청, 교사, 대학 입학처장·교수, 학부모 대상 설문·FGI 포함
- 「사교육 경감대책」 및 ‘킬러문항 사례’ 제시를 통해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 추진방향 발표(’23.6.26.)
- **학부모 대상 FGI 및 사전 설문조사 시행**(’23.9~10)
 - ※ 2028 대입의 당사자인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중심

붙임 3 **내신 평가방식 및 대입제도 해외사례**

- (미국) 고교 내신 평가방식은 주(state)별, 학구(district)별, 과목별, 교사별로 매우 다양하며, 대입도 대학마다 고유한 방식 채택
 - 대학들은 SAT·ACT 시험 점수, 고교 내신, 에세이·추천서 등을 주로 평가해 왔으나, 최근 SAT·ACT 미반영 대학 증가 경향*
 - * (주요 원인) 시험 점수가 실제 대학 적응 수준을 예측하지 못하며, SAT 등은 연 7~8회 치러지므로 부유한 학생은 반복 응시해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비판
 - 대학의 방침 변화에 따라 SAT도 핵심 지식 위주로 평가하고 문항 수를 줄여 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의 방향으로 변화 추세
- (일본) 고교 내신은 절대평가 5등급(A~E) 적용되나, 보통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 사립대학의 학교장 추천전형 위주로 활용
 - 국가수준 대입 시험은 30년간 실시된 ‘센터시험’을 폐지(‘20.)하고 사고력·판단력·표현력 중심의 ‘대학입학 공통테스트’*로 개정
 - * 당초 논술형 문항 도입 예정이었으나, 민간사업자에게 채점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채점자의 질 확보, 채점기준 타당성, 일정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연기 결정
- (프랑스) 대입에 국가수준 대입 시험인 ‘바칼로레아’ 60%, 고교 내신 40% 반영, 고교 내신이 ‘공통 시험’과 ‘학생부’로 구분
 -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 시험’은 고교 2~3학년 때 치르며, 학교별 시험인 ‘학생부’보다 대입 반영비율 높음(공통 시험 30%, 학생부 10%)
 - ‘바칼로레아’ 개편으로 계열 구분(문학, 경제·사회, 과학)이 폐지되고 응시 과목 수도 개인차가 없게 5개로 축소(계열별 10~15개→5개)
- (중국) 대부분 내신 절대평가 4등급(A~D) 적용*되나, 통상 대입은 국가수준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가 가장 중요
 - * 학교가 아니라 성(省) 단위의 학업능력고사로 평가, 안휘성(省)은 상대평가 4등급
 - ‘가오카오’는 영어·수학 등 다양한 과목에서 800자 이상 논술형 평가 실시, 지역(省) 교육평가원 및 지정 대학에서 나누어 채점

< 각국의 내신 평가방식 요약 >

국가	고교 내신 평가방식		대학 제공 (대입 반영)	비고
미국	5등급 (A~E) ※ E: 과락	절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예: A=4, B=3 등으로 GPA 환산) 	주(state)마다 평가방식 다양
일본	5등급 (A~E)	절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한 대학의 학부·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의 평균성적(GPA) 	고교 내신을 평가에 반영하는 대입전형이 한정적
프랑스	5등급 (약간 우수, 우수, 매우우수 등)	절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2~3학년 과목 성적의 학년별 평균성적 	
홍콩	5등급 (A~E)	절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등급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3단계 세분화 (A⁺⁺, A⁺, A) 	대입에서는 상대평가 점수인 표준점수 활용 A등급 세분화
호주	5등급 (A~E)	절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점수로 환산 수강 과목 중 우수한 성적 4개 제출 	대입에서는 상대평가 점수인 표준점수 활용
영국	6등급 (A ⁺ , A~E)	절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점수로 환산 A등급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세분화(A⁺, A) 	대입에서는 상대평가 점수인 표준점수 활용 A등급 세분화
중국	4등급 (A~D)	절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학교가 아닌 지역(省) 단위의 내신 성적 (학업능력고사), 일부 지역은 상대평가 시행

붙임 4 **학부모 대상 FGI 및 설문조사 결과**

□ **학부모 대상 FGI 결과**(‘23.9월말)

- ※ 교육정책에 관심이 많고 중학생 자녀가 있는 수도권(6인)·비수도권(5인) 학부모 대상
-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진로·선호가 반영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점은 기대되나, 교사 역량·시설 확충 등 실제 운영상의 우려 존재
 - ※ (수도권) 학점제 과목은 대학·학과를 고려해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것
- (내신 평가) 절대평가 시 학생들의 부담 완화에는 동의하나, 학력 저하 및 내신 부풀리기, 상대평가 적용 고1 부담 편중 가능
 - ※ (비수도권) 특목고 등 내신 성적의 불리함이 사라지는 경우, 지역 간 학력 격차 심화 우려
- (통합형 수능) 선택과목 유불리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같은 범위로 시험을 보는 것이 공정하며, 이때 변별력 확보는 필수라 생각
- (논·서술형 수능) 선다형은 정답 찍기 문제가 있지만, 채점 기준의 공정성 논란, 사교육 과열 등으로 ‘수능’ 논·서술형 도입 회의적
 - ※ 논·서술형이 학업 수준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

□ **학부모 대상 사전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23.9월말~10월초)

- (항목별 동의율*) ①수능 통합형 과목체계 73.0%, 통합사회·과학 61.2%, 심화수학 41.8%, ②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 88.6%, 5등급제 76.6%
 - * ‘동의한다’ + ‘어느 정도 동의한다’ 응답 비율
- (총평) 위 항목들이 2028 대입개편에 반영된다면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416명), ‘긍정적’(680명) → 긍정 응답이 87.0%
 - ※ 매우 긍정적 416명(33.0%), 긍정적 680명(54.0%), 부정적 124명(9.9%), 매우 부정적 39명(3.1%)

학부모 의견	① 수능 개편			② 고교 내신 개편	
	통합형 과목체계	사회·과학 통합	심화수학 출제	절대·상대평가 병기	5등급제 전환
동의	595 (47.3%)	407 (32.4%)	242 (19.2%)	700 (55.6%)	587 (46.6%)
어느 정도 동의	324 (25.7%)	363 (28.8%)	284 (22.6%)	416 (33.0%)	377 (30.0%)
별로 동의하지 않음	194 (15.4%)	267 (21.2%)	389 (30.9%)	68 (5.4%)	160 (12.7%)
동의하지 않음	146 (11.6%)	222 (17.6%)	344 (27.3%)	75 (6.0%)	135 (10.7%)
합 계	1,259 (100%)	1,259 (100%)	1,259 (100%)	1,259 (100%)	1,259 (100%)

※ 학부모 총 1,259명 설문 응답